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4주년 기념 학술회의

한국전쟁 70주년



“오래된 전쟁, 새로운 평화”

일시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09:30~16:00

장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101동 210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초대인 글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창립 14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70년을 회고하며 전쟁의 유산과 평화의 가치를 성찰하기 위한 학술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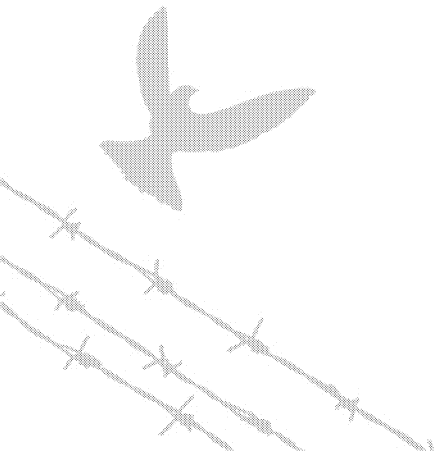
온라인(ZOOM)으로도 참여가 가능하오니 이번 학술회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6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임 경 훈 올림

| 프로그램

등록	09:30
환영사 여정성 서울대 기획부총장	09:40
인사말 임경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09:50
세션1 한국전쟁의 유산	10:00-12:00
사회 박명규(서울대)	
발표 한국전쟁과 민족주의의 분화 김범수(서울대)	
유엔사 규정(UNC Reg.) 유엔군사령부의 DMZ 관리 한모니까(서울대)	
전쟁과 평화의 사회적 기원 : 한국전쟁의 다섯 가지 쟁점 김학재(서울대)	
토론 김병로(서울대), 최철영(대구대), 홍석률(성신여대)	
오찬	12:00-13:30
세션2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 : 전망과 과제	13:30-16:00
** 라운드 테이블	
사회 김성철(서울대)	
발표 핵·평화체제 : 전재성(서울대)	
경 제 : 김병연(서울대)	
사회·문화 : 정근식(서울대)	
남 북 관계 : 천해성(서울대)	
보 건 의 료 : 박상민(서울대)	



목 차

세션 1

한국 전쟁의 유산

김범수(서울대)	한국전쟁과 민족주의의 분화	3
한모니까(서울대)	유엔사 규정(UNC Reg.) 유엔군사령부의 DMZ 관리	33
김학재(서울대)	전쟁과 평화의 사회적 기원 : 한국전쟁의 다섯 가지 쟁점	51
토론문 김병로(서울대), 최철영(대구대), 홍석률(성신여대)		69

세션 2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 : 전망과 과제

전재성(서울대)	비핵화, 평화체제	81
김병연(서울대)	남북 경험방안의 모색	89
정근식(서울대)	한국전쟁의 유산을 넘어 지속가능한 평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101
천해성(서울대)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 : 전망과 과제(남북관계)	113
박상민(서울대)	코로나 19 이후 지속가능한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	119

세션

1

한국전쟁의 유산

사 회 : 박명규(서울대)

발 표 :

김범수(서울대), 한국전쟁과 민족주의의 분화

한모니까(서울대), 유엔사 규정(UNC Reg.) 유엔군사령부의 DMZ 관리

김학재(서울대), 전쟁과 평화의 사회적 기원 : 한국전쟁의 다섯 가지 쟁점

토 론 : 김병로(서울대), 최철영(대구대), 홍석률(성신여대)

세션

1

한국전쟁의 유산

한국전쟁과 민족주의의 분화

김범수(서울대)

한국전쟁과 민족주의의 분화

김범수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통일평화연구원)

- 본 연구는 1948년 8월 15일부터 1960년 4월 26일까지 신문기사 검색을 통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한국 사회의 지배적 민족주의 담론으로 등장한 단일민족 민족주의가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단일민족 민족주의”, “반공민족주의”, “대한민국 민족주의” 등 3가지 민족주의 담론으로 분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함.
- 단일민족 민족주의는 남북한에 거주하는 모든 한민족을 “우리 대한국민”의 범주에 포섭하는 민족주의로 이승만 정부 시기 공식적인 정부 입장을 대변함.
- 반공 민족주의는 단일민족 민족주의의 변형으로 북한의 “빨갱이” “공산도당”을 “우리”의 범주에서 배제하고 남한에 거주하는 국민과 북한의 “애국 동포”만을 “우리 대한국민”의 범주에 포섭함.
- 대한민국 민족주의는 남한의 “이천만 국민”과 북한의 “일천만 동포”를 구분하고 전자만을 “우리 대한국민”의 범주에 포섭하는 민족주의로 분단과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민족주의 담론.
- 본 연구는 이승만 정권 시기 이 세 가지 민족주의 담론이 공존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함.
- 특히 대한민국 민족주의의 등장은 한국 사회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이천만 국민”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상의 공동체”를 상상함으로써 “민족”의 경계와 “국민”의 경계를 일치시키려 하였음을 시사함.

한국전쟁과 민족주의의 분화

김범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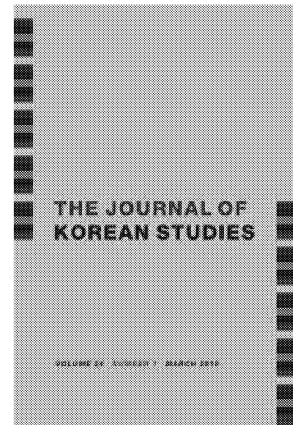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통일평화연구원

Research Questions

- 19세기 말과 일제강점기 시기를 거치며 조선(한국) 사회의 지배적 민족주의 담론으로 등장한 “한민족 단일민족주의” 는 분단과 한국 전쟁을 거치며 어떻게 변화했는가?
- 분단 이후 공동의 민족·국가 정체성을 공유하는 “우리 대한국민”의 경계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 Who was included into, and was excluded from, “we, the people of Korea”?
- Especially, did South Koreans’ notion of “we, the people of Korea” include North Korean compatriots (*pukhan tongp’o* or *ibuk tongp’o*), residing in North Korea which the constitution of the ROK stipulated as a part of the ROK’s territory but over which the ROK was not able to exert its jurisdiction, or exclude them?

Are North Korean Compatriots “Korean”?
The Trifurcation of Ethnic Nationalism in South Korea during the Syngman Rhee Era (1948-1960)

Journal of Korean Studies,
v. 24, no. 1, pp. 149-171



단일민족 민족주의의 등장

- 1905년 을사보호조약: 국가의 주권과 독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나의 “독립적 단위 entity”로 유지할 것인가?
- 하나의 정치적 entity로서 “우리”는 누구인가? 왕조 vs. 국가 vs. 민족
- 신채호 「讀史新論」 (1908년 『대한매일신보』 연재) 국가와 민족의 분리
- 왕조 교체, 국가 교체에 상관없이 우리 민족은 단군 이래 지금까지 하나의 “entity”로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 단군 이래 4천년의 역사는 부여족의 역사이다. 단군의 정통이 부여로, 그 다음에는 고구려·백제·신라·가야로 계승되며, 고려·조선으로 이어진다.
- 일제가 국가 주권을 강탈했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은 영원히 지속된다.

단일민족 민족주의의 발전

- 일제강점기 민족주의 사학: 박은식, 정인보, 안재홍 등
- 국가 주권을 빼앗겼다 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우리 민족은 영원히 계속된다. → 박은식: “민족 혼”은 지속된다.
- 일제의 민족말살정책 vs. 민족문화 수호 운동의 긴장 관계
- 한민족 단일민족론: “한반도에 거주하는 한민족은 모두 단군의 자손으로 동일한 혈통, 언어, 문화, 역사를 공유하는 단일민족이다.” “우리 모두는 단군의 자손으로 형제자매이다.”
- 일본인과 한국인은 같은 조상에서 유래했다는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과 일본인과 조선인은 하나라는 “내선일체론(內鮮一體論)”

해방 이후 단일민족 민족주의

- 해방 이후 우익 민족주의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를 합리화하는 수사로 한민족 단일민족주의론을 활용하면서 단일민족주의 담론이 한국 사회의 지배적 민족주의 담론으로 자리 잡게 됨.
- 특히 단일민족주의 담론이 반탁운동의 주요 논거로 활용되며 지배적 민족주의 담론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됨.
- 김구: “우리 민족 개개인이 혈관 속에는 다가치 단군 선조의 성혈이 흐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극소의 친일과 민족반도를 제한 외에 무릇 한국 동포는 마치 한사람 가치 굳게 단결”하여야만 “비로소 우리의 독립 주권을 창조할 수 있고 소위 38도선을 물러쳐 업셀 수 있”다(1945년 12월 19일, 임시정부 환국 환영대회)
- 이승만: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으로 유구한 5천년 독립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탁통치는 우리 민족에 대한 모욕**”이다. (1945년 12월 29일)

해방 이후 단일민족 민족주의

- 단일민족주의는 미소에 의한 남북 분할 점령을 반대하는 논리로 활용됨.
- “남북한에 거주하는 모든 동포가 단군의 자손으로 하나의 민족”이라는 한민족 단일민족주의론은 해방 정국을 거치며 일종의 “신화”가 되어 한국 사회의 일반적 통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 일부 좌익 세력을 제외한 남한의 주요 정치 세력들은 적어도 남북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 활동이 1947년 10월 완전히 결렬되기 이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북한 동포도 “우리”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공유함.
- 1946년 6월 3일 “정읍발언” 이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필요성을 주장한 이승만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남과 북에 거주하는 삼천만 동포가 하나의 민족”이며 북한 동포도 “우리”의 일원이라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분단 이후 단일민족 민족주의?

-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
-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
-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 남북 분단이 공식화된 이후 한국 사회 내에서 북한 동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 북한 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즉 국민정체성을 공유하는 “우리(we)”의 일원으로 포섭했는가 아니면 이들을 “비국민”으로 배제했는가?
- 헌법 전문에 헌법 제정의 주체로 명기된 “우리대한국민”은 누구인가?
- 한민족 단일민족주의는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기존 연구

- 기존 연구의 상당수는 단일민족 민족주의가 해방 이후 현재까지 한국 사회의 지배적 민족주의 담론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
- Andre Schmid, *Korea between Empires 1895-1919* (2002)
- Schmid argues that “ethnic nationalism” as such continues to prevail in South and North Korea even today and, as a result, “[though] two state, one *minjok*, describes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peninsula,” “the *minjok* united as a single state remains the ideal [on both sides of the Korean peninsula].”
- That is, despite the division of Korea in reality, Schmid suggests, **South Koreans still maintain that all Koreans of South and North Korea belong to the same ethnic nation** on the basis of a common bloodline and shared ancestry.

기존 연구

- Gi-Wook Shin, *Ethnic Nationalism in Korea* (2006)
- He argues that, under the influence of ethnic nationalism which assumes the Korean nation as an ethnically homogeneous *Tanilminjok* and treats all Koreans as descendants of *Tan'gun*, South Koreans have developed “national identity based on shared bloodline and ancestry.”
- According to him, South Koreans “consider ‘blood’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of defining the Korean nation,” and believe that “[because] our nation has a single bloodline” “Koreans are all brothers and sisters regardless of residence and ideology.”
- Citing a survey which he conducted in the fall of 2000 in South Korea, Shin even points out that **South Koreans regard “North Korean people” as belonging to “the same ethnic nation.”**

Arguments

- Emphasizing the ethnic nature of Korean nationalism, previous studies suggest that *Tanilminjok* nationalism has remained intact since the early 20th century.
- To be sure, it is undeniably true that ethnic nationalism as such has prevailed in South Korea even after the division of Korea while “[providing] the rationale underlying most arguments for reunification.”
- Following the division of Korea, however, **different versions of ethnic nationalism emerged in South Korea**. That is, experiencing the reality of the division of Korean, many South Koreans began to “imagine” the boundaries of “we, the people of Korea” differently though acknowledging that historically all Koreans of South and North Korea, regardless of their place of residence and ideology, belong to the same ethnic nation.

Arguments

- Paying insufficient attention to this ramification, previous studies often describe Korean nationalism as a static one, the core of which (especially, the “imagined” boundaries of the Korean nation) has remained intact since the early 20th century.
- To criticize these studies, this study will demonstrate that, after the division of Korea, Korea’s ethnic nationalism trifurcated, at least in South Korea, into three different but closely related versions: *Tanilminjok* nationalism, anticommunist nationalism, and *Taehanmin’guk* nationalism, and that the balance among them gradually shifted from *Tanilminjok* nationalism to *Taehanmin’guk* nationalism as the division of Korea solidified, in particular, after the Korean War.

Methodology

- Benedict Anderson: “**Print capitalism**”
- Analyzing newspaper articles of *Chosŏnilbo*, *Dongailbo* and *Kyunghyangsinmun* from Aug. 15, 1948 to April 26, 1960.
- *Chosŏnilbo* available at <http://kiss.kstudy.com>
- *Dongailbo* and *Kyunghyangsinmun* available at <http://newslibrary.naver.com>
- Keywords:
 - “*pukhan tongp’o* (North Korean compatriots)”
 - “*ibuk tongp’o* (compatriots of the North)”
 - “*kungmin* (nationals or the people)”
 - “*minjok* (nation or ethnies)”
 - “*kyŏre* (nationals or the people),”

연구결과 요약

- Until the early 1950s, despite the division of Korea, an **inclusive narrative** which included North Korean compatriots into the “imagined” boundaries of “we, the people of Korea” was **dominant**.
→ 단일민족 민족주의 *Tanilminjok* (one homogeneous nation) nationalism
- With the division of Korea, however, an **exclusive narrative** which excluded North Korean compatriots from the “imagined” boundaries of “we, the people of Korea” gradually **emerged** in South Korea.
→ 대한민국 민족주의 *Taehanmin’guk* (the Great ROK) nationalism
- Mean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nticommunism, which functioned as a governing ideology of the Syngman Rhee government, a different version of ethnic nationalism, that is, anticommunist nationalism, which distinguished “commies” from “patriotic compatriots” of North Korea, and excluded the former from “we, the people of Korea” by otherizing them as “anti-nationalists,” **emerged** in South Korea in those days.
→ 반공 민족주의 Anticommunist nationalism

연구결과 요약

- 단일민족 민족주의: South and North Koreans belong to the same nation regardless of their place of residence and ideology.
- 반공 민족주의: South Koreans and “patriotic compatriots (*aeguk tongp’o*)” of North Korea belong to the same nation, but “commies (*kongsan tobae*)” are “traitors of the nation (*minjok ūi paesinja*) who betray the fatherland and the nation,” “enemies of the nation (*minjok ūi wŏnsu*),” “anti-nationalist elements (*panminjok punja*),” or “obstructors of the unification (*t’ongil ūl panghaehanŭn cha*).”
- 대한민국 민족주의: “We, the people of Korea” includes only South Koreans while excluding North Korean compatriots.
- Though the three versions coexisting in those days, the balance among them shifted gradually from *Tanilminjok* nationalism to *Taehanmin’guk* nationalism as the division of Korea solidified, in particular, after the Korean War (1950-1953). 단일민족 민족주의 → 대한민국 민족주의

단일민족 민족주의

- 단일민족 민족주의는 사실상 이승만 정부의 공식 입장.
- 이승만 정부는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음. 북한은 괴뢰정부이며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입장을 견지함.
- **Despite the division of Korea (1948)**
- President Rhee and government officials' statements
- Newspaper editorials and columns
- When referring to the members (constituents) of the ROK (대한민국), they usually used such terms as "*samch'ŏnman* (삼천만; thirty-million)," "*samch'ŏnman uri* (삼천만 우리; we, thirty-million)" "*samch'ŏnman dongpo* (삼천만 동포; thirty-million compatriots)," "*samch'ŏnman kungmin* (삼천만 국민; thirty-million citizens)," "*samch'ŏnman minjok* (삼천만 민족; thirty-million nationals)," etc.

단일민족 민족주의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 The total population of South Korea at the end of 1946 was 19,369,270. (about twenty millions)
- The total population of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1949 population census, 20,167,000. (about twenty millions)
- The estimated total population of North Korea in 1949 was 9,740,000. (about ten millions)
- From these population data, it is possible to infer that the commonly used term "*samch'ŏnman*" included not only South Koreans but also North Koreans.

단일민족 민족주의

- President Rhee's speech (Sep. 30, 1948)
- “신산(新産) 민국의 영광스러운 역사적 이 마당에 본인이 존중한 대통령의 중책을 맡아 이제 국회의원 제위와 **국내국외 삼천만 동포(thirty million compatriots of home and abroad)**앞에 시정의 대요를 피력함은 나의 가장 흔쾌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 **주권은 오로지 삼천만 민족에게 있고 (sovereignty is in the thirty-million nationals)**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책임이 기본적으로 만민에 균등한 국가인 것입니다. ... 또 정부는 위선(爲先) 남한에 있어서 시급히 국군을 건설하고 국방에 필요한 시설을 촉진하여서 ... 안으로는 **반만년의 전통에 빛나는 삼천만 동포의 민족적 도의적 공동번성으로서 민족통일 강토완정에 지향하는 남북통일국가** 조기실현에 매진할 것입니다. ... ”
- 『경향신문』 “대통령 시정 방침 전문,” 1948년 10월 2일

단일민족 민족주의

- The Representative Leader, Chang Myŏn's speech at the U.N. General Assembly (Dec. 7, 1948)
- “유엔 총회에 참집한 세계 제 주권국가 대표 앞에서 연설하게 되는 것을 대한민국 대표의 나로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삼천만 한국 국민**은 “유엔”을 가장 큰 희망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있다. ... 시위위원단이 그 공식 보고에서 언명한 바와 같이 1948년 5월 10일 선거 결과는 위원단의 힘이 미칠 수 있으며 **전(全) 한국 국민의 약 삼분지일이 거주하는 ... 한국 인민의 삼분지이 이상 즉 이천만 명(two-thirds of the total Korean population, that is, twenty millions)**이 유엔 감시 하에 선거를 실시하고 정부를 수립하고 자신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성이 있는 자라면 일외국(一外國; 필자, 소련을 지칭함)이 **우리 인민의 삼분지일(a third of our people)**을 선거에 참가시키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서 우리의 정부가 부인된 것이며 인정받지 않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 『동아일보』 “한민족의 절규 유엔 정위 석상 장면씨 연설,” 1948/12/22.

단일민족 민족주의

- 1949년 4월 16일 유엔한국위원회와 협의를 마친 내무부장관 김효석 발표문
- **▲한국 통일문제 = 대한민국 정부는 전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니 북한이 민국의 영토이라 함은 더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민족을 순수단일혈족이고 외국에서 보는 것과 같은 종교적 파쟁이나 종족적 대립이나 전통문화의 상극이 조금도 없는 민족이니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바이다. 북한의 일천만 동포는 독재와 탄압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동포를 위하여 국회의석 백석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니 하루바삐 북한에도 작년 5·10 선거와 같은 선거가 실시됨을 바라며 이로서 전한국대표가 참가한 국회에서 민주적 방법에 의하여 모든 문제가 논의 결정될 것이다**
- 『동아일보』, “이북선거 요망,” 1949/4/16.

단일민족 민족주의

- 반공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한 1952년 9월 12일 외무부장관 변영태 담화
- **우리 북한의 땅도 우리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강토임에는 조금도 남한과 틀림이 없는 것이다. 북한 동포는 무자비한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학대를 받고 있으나 어서 빨리 해방되어야 할 우리의 동족이다. 귀환할 것을 거절하여 우리와 함께 싸우고자 원하는 그들은 공산도배의 멍에로부터 속히 해방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이들을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버린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절대로 못할 것이다. ... 또한 그것은 이북에 있는 우리의 모든 동포를 외국 사람으로 간주하는 일이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들이 이러한 패륜의 사태를 그대로 승인한다면 우리의 주권과 독립을 우리로부터 침식되고 말 것이며 집단방위도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 『조선일보』, “북한 동포도 우리 겨레 외국인 취급은 절대 할 수 없다,” 1952/9/14.

단일민족 민족주의

- 1954년 6월 27일 “수복 지구” 행정권 이양 문제와 관련한 국무총리 변영태의 1954년 8월 12일 담화
- 공산 학정을 피하여 월남한 수백만의 북한 동포들을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따뜻한 동포애로 맞아들이는 사실에 비추어보거나 또 공산 학정 하에서 본의 아닌 노예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아직 해방되지 아니한 북한 동포를 우리 정부는 현재 그 치하에 있는 동포(필자: 남한 동포)와 조금도 차별 없이 국민시(國民視)하는 국가적 양심과 세계만방이 공인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충분히 발휘하는 점으로 보아서도 대한민국 정부와 장래 수복될 지구에 있는 주민 사이에 제3행정 세력의 개입은 용허될 수 없는 것은 자명의 이(理)가 아닐 수 없다
- 『동아일보』, “수복지구 행정권 이양,” 1954/8/13.

단일민족 민족주의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북한 동포의 국적 및 법적 지위와 관련한 이승만 대통령 및 정부의 입장
- 1) “남과 북에 거주하는 삼천만 동포는 모두 단군의 자손으로 하나의 단일민족이다”라는 한민족 단일민족주의론
- 2)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4조의 영토조항
- 3)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의 승인을 받은 한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북한은 “우리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괴뢰정부”라는 “유엔이 승인한 대한민국 유일 합법정부론”
- 위 3가지 논거를 근거로 북한의 국가로서의 실체를 부정하고 북한에 거주하는 모든 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

단일민족 민족주의

<Table 1> The Number of Editorials mentioning “Thirty Million”

Year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Newspaper							
Kyŏnghyangsinmun	2	13	1**	0**	46	3	4
Tongailbo	18	27	9***	7	9	6	2
Total	20	40	10	7	55	9	6
Year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Total
Newspaper							
Kyŏnghyangsinmun	1	4	2	2	0	0	78
Tongailbo	3	6	1	5	0	1	94
Total	4	10	3	7	0	1	172

*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of each year.

** Except the period from June 28, 1950, to December 31, 1951, in which the publication of newspapers was stopped by the Korean War and unavailable for searching.

*** Except the period from June 28, 1950, to October 3, 1950, in which the publication of newspapers was stopped by the Korean War and unavailable for searching.

반공 민족주의

- 단일민족 민족주의 + 반공주의: 단일민족 민족주의의 변형
- South Koreans and “patriotic compatriots (*aeguk tongp’o*)” of North Korea belong to the same nation.
- But a small number of “commies (*kongsan tobae*)” are “traitors of the nation (*minjok ūi paesinja*) who betray the fatherland and the nation,” “enemies of the nation (*minjok ūi wŏnsu*),” “anti-nationalist elements (*panminjok punja*),” or “obstructers of the unification (*t’ongil ūl panghaehanŭn cha*).”
- “Commies” are “puppets” of the USSR and belong to a different nation (the USSR).
- 빨갱이와 공산 괴뢰는 소련의 앞잡이로 우리 민족의 배신자

반공 민족주의

-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
- 1950년 5월 6일 중앙방송국을 통해 북한 동포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북 동포 중에서 공산주의 선동에 빠져 나라를 남에게 팔고 민족을 남의 노예로 만들라고 활동하는 분자”**들에게 “일조(一朝)에 회개해서 합심합력으로 강토를 회복하며 민족통일을 이루어서 다같이 자유 환락을 누리고 살자는 결심이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공산분자”들을 “동족이라고 할 수도 없”는 자로 규정
- 그들은 **동족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인류라고 인정할 수도 없을 것임으로 이러한 분자들은 일일이 토벌해서 삼천리 국토에서 발을 부치고 살 수 없을 만치 만들 것이니 ...** 세계 각국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결심이 있는 것을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 『동아일보』, “이 대통령 대 이북 방송,” 1950/5/7.

반공 민족주의

- 신문 사설 등
- “자주노선의 승리”라는 제목의 1949년 5월 13일자 『동아일보』 사설
- **대한민국은 이북 동포들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괴뢰정권을 형성하고 있는 일련의 반민족적 분자는 민족정기에 비추어 엄숙히 고두(叩頭)하여야 할 것이다.** 유엔은 한국국민이 자주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자유스러운 투표에 의하여 그 대표를 선거하는 길이었다. 이 자주적 방법에 의한 독립을 이북정권은 반대하였다. 왜? **독립을 반대하고 소련의 연방화를 의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한국인이 생명을 도(賭)하여 반대하는 바다.
- 『동아일보』, “자주노선의 승리,” 1949/5/13)

반공 민족주의

- “실력 구출의 단계”라는 제목의 1949년 11월 22일자 『동아일보』 사설
- “스미스”호 사건은 무지한 소아의 범죄와 같다. **핏줄기는 형제이면서 그 심사는 구적(仇敵)과 같은 이 나라의 공산도배**는 세계의 모든 저의 유당(類黨)과 마찬가지로 **“그레프린”을 옹호함으로써 천직을 삼고, 동족을 살육하며 동포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공을 세우는 이 나라의 공산도배**는, 그리하여 **조국을 망치고 민족을 팔아 서슴치 않은 이 나라의 공산도배**는 이 나라가 세계의 정의와 우방의 원조로 건전한 성장발전을 보고 있음을 시기하고 전표(戰標)한 나머지 우방의 선박을 나포하고 우방의 인사를 납치 구금함으로써 양국간의 우의를 이간하고 ... 조국을 곤경에 빠뜨리자는 암상한 생각이 범죄의 동기의 하나일 것이요 ...
- 『동아일보』, “실력 구출의 단계,” 1949/11/22.

반공 민족주의

- “민족통일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냐”라는 제목의 1956년 9월 12일자 『동아일보』 사설
- 북한 괴뢰들이 화평통일을 말하고 남북협상을 선전하며 「조선 문제는 조선인의 손으로 해결하자」는 구호를 밤낮없이 방송하고 있지마는 **소련과 그 추종자들이** 한국을 제이의 「체코」화 하려는 야심을 버리지 않는 한 그 선전의 허위성은 너무도 뻔하게 들여다보인다. 만일 **소련의 고나플린 공산도당**이 물러서고 **진정한 한인**끼리 한국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개척한다면 우리의 통일문제는 복잡한 협상이니 무엇이니 할 여지도 없이 하루아침에 결말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국의 분단대립은 결코 한국인 간의 대립이 아니요 **자유를 생명으로 하는 한국민족 전체와 자유를 부정하는 소련 침략자**와의 대항임에 지나지 않는다.
- 『동아일보』, “민족통일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냐,” 1956/9/12.

반공 민족주의

- “남북통일은 북한 자유선거로”라는 제목의 1957년 11월 15일자 『조선일보』 사설
- 괴뢰집단은 소련과 중공의 수개의 공산당 독재자에 의하여 움직이는 일종의 포로와 마찬가지로인 것도 더 설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저들은 이 땅의 민족으로서 조국을 사랑하는 하등의 진심을 가지지도 못했고 따라서 민족의 전통과 역사의 방향을 존중하여 자신들의 민족국가를 이룩하여야 하겠다는 하등의 일관된 정신이나 방안도 없는 것이다. ... 겹하여 저들의 권력의 폭압이 항상 공포와 전율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중공군에 의하여 자유를 사랑하는 동포의 정당한 움직임을 더 한층 억압하고 있는 한에는 통일문제를 직접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 할 것이다.
- 『조선일보』, “남북통일은 북한 자유선거로,” 1956/9/12.

대한민국 민족주의

- 1948년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에 따라 남북분단 공식화
-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민족 단일민족주의론과 “유엔이 승인한 대한민국 유일 합법정부론”에 근거하여 북한 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이자 “우리”의 일원으로 인식
-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남북분단이 현실에서 점차 고착화함에 따라 이러한 포괄적 인식과 별개로 북한 동포를 배제한 채 남한에 거주하는 “이천만 국민”만을 “우리”의 범주에 포섭하는 배타적 인식이 서서히 한국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
- 남한의 이천만 국민 vs. 북한의 일천만 동포

대한민국 민족주의

- “독립의 선포와 우리의 각오”라는 제목의 1948년 8월 15일 경향신문 사설.
- “우리 이천만”과 “남어지 일천만 동포”를 구분
- 오늘부터 우리는 자주독립 국민임을 만방에 선포하면서 세계 열국의 일원으로서 미지의 희망봉을 바라고 원양의 항로를 달린다. 남들은 거대한 함선을 가지고 호세(豪勢)를 뽐내는 반면 우리는 일엽편주인 「대한호」에 이천만이란 무거운 짐을 실고 풍운저미 속에 천신만고 난항을 하고 있지 않은가. ... 우리 뒤엔 남어지 일천만 동포가 신생의 항로를 달리는 우리 이천만에게 부조와 구출을 울며 웨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찌 부질없이 기쁜 마음에만 도취될까보냐. ... 이것으로 우리는 독립경축사에 대(代)하여 삼천만 동포에게 호소한다.

대한민국 민족주의

- “이북 동포에 보내는 글월”이라는 제목으로 1949년 1월 4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이헌구의 칼럼은 “일천만 이북 동포”를 “동포여 형제여 자매여”로 호칭하는 동시에 “그대들”로 표현하며 “이남의 우리들”과 구별
-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나의 멀리 사모하는 알고도 모르는 일천만 이북 동포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축복과 아울러 소감의 일단을 피력하는 광영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하여 마지않습니다. ... 도라보면 그대들이나 이남의 우리들이나 다 같은 운명 선상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다만 다르다고 하면 우리는 미군정하에서 우리의 조국광복을 위하여 열렬히 싸워온 끝에 대한민국을 창건하여서 48개 우방의 절대 한 승인을 받기까지에 이르렀으나 불행이도 그대들은 소련의 위성 국가 정책에 휩쓸리어 그대들의 전 혈관과 전 신경과 전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독립정신을 말살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족주의

- “원조물자의 활용”이라는 제목의 1949년 7월 25일자 『동아일보』 이 건혁의 칼럼은 미국경제협력청(ECA)의 원조를 잘 활용하여 북한으로부터 남한의 “경제적 독립”을 이루자고 역설하며 “우리”의 범주에 북한의 “일천만 동포”를 배제한 채 “남한 이천만”만을 포섭
- 더구나 이북에서 단전 이후의 남한의 사정이란 기막힌 것이었다. ... 이대로 가다가는 문자 그대로 총파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닐 뻔했다. 이때에 ECA 원조가 문제를 해결해주게 된 것이다. ... 그러면 반문하 노니 국토를 양단시키고 전기까지 안보내면서 **남한 이천만**은 그대로 앉아서 죽으라는 말이냐? 욕할 자는 욕하라. **우리는 살아야겠다. 살자면 경제적으로 (북한으로부터; 필자) 독립해야겠다.**

대한민국 민족주의

- 경제·일상생활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북한의 “일천만 동포”를 배제한 채 “남한 이천만”만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상상”하는 경향은 한국 전쟁 발발 이후 점차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
- When dealing with the issues of economic statistics, taxation, rice problem, public health and nutrition, coal supply, fishery, etc. in which South Korea had developed its own independent system separated from North Korea, many newspaper articles explicitly pointed out that “the total population of our country (*uri nara*)” was “twenty million,” and excluded “ten million *tongp’o*” of North Korea from this category.
-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2천만이다.”

대한민국 민족주의

- 『경향신문』, “생산주의와 통화주의,” 1953/8/18.
- 말하자면 **이천만 인구의 대세대(大世帶)로서** 오늘날의 물가를 표준으로 한 화폐 총 유통량으로는 도저히 그 정상한 거래가 불가능한 정도이다. 현 수준의 물가를 사실상 긍정하지 아니치 못하는 한 통화량의 축소를 함부로 시행한다는 것은 퇴축한 경제를 더욱 퇴축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즉 **이천여만 인의 매인 평균 통화 소유량은 650원 정도이니** 이들 물가의 최 저렴한 부면인 식량가격에 대조하여 볼지라도 일인당 미(米) 오승(五升) 대가(代價)에 불과한 것이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 시책에 있어 소위 중간안정론을 부르짖은 지 오래이지마는 산업계의 퇴축, 취업의 공소로서는 도저히 기대와 같은 과실을 거두기 어려운 것이니 생산 제일주의이냐 통화 안정주의이냐는 **한국경제**의 복구 내지 건설에 있어 매우 중대한 영향을 가져올 바 시책상의 대목표의 기점일 것이다.

대한민국 민족주의

- 『경향신문』, “결핵시책 5개년 안 (1),” 1954/4/25.
- **한국 국민**의 결핵 사망자가 매년 6만 명으로 전 사망자의 최고위를 점하고 **전 국민의 6.5%가 결핵병에 걸려 있으니** 현재 국민보건에 일대 암이 아닐 수 없다. ... 한국의 집단 검진 통계를 보면 2.5%를 활동성 결핵으로 증명하고 있으니 환언하면 전부가 건강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도 엄밀한 과학적 검사를 받아보면 평균 천명에 25명이 현재에 발병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이천만 국민**이 전부를 집단 검진을 받아볼 때에는 기중의 50만 명은 진료와 요양을 반드시 요할 환자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6.25 동란으로 인하여 국민은 전 국민의 10분지 1이 살상되고** 국민의 재산은 70%를 손실하였으며 의료기관은 80%가 파괴되어 국민체력은 피폐저하되어 있는 차제에 무서운 결핵균은 차간극을 타서 만연 전파되어 국민 보건을 여지없이 침범 파멸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민족주의

- 『동아일보』, “월동 연료 대책,” 1954/9/27.
- 세계에서 제일 기후가 좋다는 **우리 한국**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한랭 지대에 속하는 관계로 재난에 막대한 연료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 절대량의 부족은 즉 원활한 공급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인즉 가까운 예로 일본은 인구 팔천만에 석탄 생산이 연간 4,500만 톤인데 **우리**는 수입탄을 합하여 **인구 이천만**에 연간 200만 톤인바 총소비량에 있어서 육분지일에 불과한 현상이다.

대한민국 민족주의

- 『동아일보』, “영양과 식량 대책,” 1956/5/22.
- 식량 대책은 첫째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만큼 영양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수자적 근거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 참고로 지금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일인분 소요량을 계산하면 **우리나라 총인구** 중에는 어린이도 있고 노인도 계셔서 성인만이 아니나 성인으로 환산하여 **대체 이천만 명**으로 보고 **이천만 명**의 일일분(一日分) 탄수화물량은 2,400,000관(貫) 단백질은 420,000관(貫)이다.

대한민국 민족주의

- “국민”과 “우리”의 범주에 “남한 이천만”만을 포섭하는 경향은 한국전쟁 이후 분단이 고착화함에 따라 점차 경제·일상생활과 관련한 문제뿐 아니라 정치·외교 등의 문제를 언급할 때도 나타나기 시작
- 한국은 아세아동남단에 위치한 삼면해안과 일면대륙에 인접하고 있는 반도이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소련 산하 중공세력의 오역칠천 만을 배경으로 하는 삼팔 이북의 괴뢰집단은 미영(美英)을 중심으로 하는 사십팔 개의 민주제국을 배경으로 하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침략과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 광범하고 대규모적인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공산진영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가능한 최대의 실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따진다면 백만도 천만도 가할 것이다. 연(然)이나 이천만 국민을 보유한 국가**로서 백만의 군대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는 새로운 각도로 냉정히 검토를 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
- 『동아일보』, “백만군 유지의 재검토,” 1956/1/18.

대한민국 민족주의

- “헌법 제19조와 사회보장 (상)”이라는 제목으로 1956년 8월 22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황종현의 칼럼
- 팔개성상(八個星霜)을 겪은 3대의 국회가 **이천만의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이천만이 누구나가 다 필요로 하고 이천만이 누구나 다 장래의 불행에 예비 못하는 현상에** 이에 대한 헌법 제19조의 조문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일까지 이렇다 할 입법조치 못하였다는 것은 국회의원인 제위가 **그간 이천만을 대변하여 이천만의 장래생활을 구호할** 무슨 입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대한민국 민족주의

- “일체성의 인식과 분화성의 확보”라는 제목의 1957년 8월 18일자 『동아일보』 사설
- **우리** 선거제도는 의사대표제에 입각해 지역을 모태로 대의원을 뽑기 때문에 “십만선량”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는 하였지만 개개의 대의원은 자기 출신구의 지방적 이익을 대변키 위해 존재함이 아니다. 그들은 개개인이 “**전체로서의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적인 이익의 소재를 밝히고 국가의사를 형성하는데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까닭으로 원내에 있어서의 여야의 의원비율이 현재 정도가 아니라 가령 소수파가 불과 몇 석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이천만 국민**이요 국민의사를 결집하고 반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끝내 다수파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상상의 공동체”

- 대한민국 민족주의 등장이 다른 민족주의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분단 이후에도 단일민족 민족주의와 반공 민족주의가 지속됨
- 일종의 공식 정부 이데올로기로 지속됨
- 분단 이후 남북 교류가 완전히 중단된 상황에서 새로운 민족주의 등장
- South Koreans began to “imagine” themselves as a different community, sometimes as a different nation, at least, in the areas of economy and everyday life in which South Korea developed its own independent system separated from North Korea, while acknowledging that historically all Koreans of South and North Korea belonged to the same ethnic nation and should unite together in the long run.

세 가지 민족주의의 공존

- In terms of the frequency, the term “thirty million” was more frequently used in newspaper articles than the term “twenty million *kungmin*” throughout the whole Rhee Syngman era (only about 14 articles in *Kyŏnghyangsinmun* and about 17 articles in *Tongailbo* mentioned “twenty million *kungmin*” explicitly).
- This is not sufficient enough, however, to prove that *tanilminjok* nationalism was more influential than *Taehanmin’guk* nationalism, because newspaper articles in the 1950s usually used the terms “*chŏn kungmin* (all the nationals)” and “*kungmin chŏnch’e* (the people as a whole),” instead of using the term “twenty million” explicitly, to refer to South Koreans only, and excluded North Korean compatriots from these categories implicitly. In fact, the numbers of *Tongailbo*’s article which mentioned “*chŏn kungmin*” and “*kungmin chŏnch’e*” from January 1, 1951 to December 31, 1960 are 1,844 and 466 respectively, many of which used these terms to refer to South Koreans only.

세 가지 민족주의의 공존

- For this reason, **without specifying quantitatively which nationalism was the most dominant one**, this study **suggests** that, as the division of Korea solidified in the 1950s, *Taehanmin’guk* nationalism emerged in South Korea as an alternative to *tanilminjok* nationalism and anticommunist nationalism, and **that this new variant coexisted with the other two**.
- 세가지 종류의 민족주의가 공존.
- 국내·국제정치적 상황, 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따라 지배적 담론이 달라짐.
- 어떤 민족주의가 어떠한 상황에서 지배적 담론이 되는가?

세 가지 민족주의의 공존

- 1960년대: 대한민국 민족주의 + 반공 민족주의
- 1968년 8·5 광복절 축사: “5천만 국민”
-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단일민족 민족주의
- 1972년 10월 유신: 반공 민족주의

- 전두환 정부(1980~1988): 반공 민족주의
- 노태우 정부(1988~1993): 단일민족 민족주의
- 김영삼 정부(1993~1998): 반공 민족주의 + 대한민국 민족주의
- 김대중 정부(1998~2003): 단일민족 민족주의 + 대한민국 민족주의
- 노무현 정부(2003~2008): 단일민족 민족주의 + 대한민국 민족주의
- 이명박 정부(2008~2013): 반공 민족주의 + 대한민국 민족주의
- 박근혜 정부(2013~2018): 반공 민족주의 + 단일민족 민족주의
- 문재인 정부(2018~): 단일민족 민족주의 + 대한민국 민족주의

대한민국 민족주의의 재부상?

- 2005년과 2010년에 실시한 동아시아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 2005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북한은 별개의 독립국가인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002명 가운데 79.4%에 달하는 796명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20.6%에 해당하는 206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북한 주민이 ‘남’인가 ‘대한민국 국민’인가라는 질문에는 21.7%의 응답자가 ‘남’이라고 응답하였다.

- 2010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북한은 별개의 독립국가인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019명 가운데 80.4%에 달하는 819명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9.6%에 해당하는 200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북한 주민이 ‘남’인가 ‘대한민국 국민’인가라는 질문에는 44.4%의 응답자가 ‘남’이라고 응답하였다.

- 강원택: 대한민국 민족주의의 등장

이론적 함의

- Gellner: Congruence between national and political boundaries.
- Seen from a Gellner's perspective, the above examination also reveals that South Koreans tried to make the "national" boundaries congruent with the political ones of the ROK by imagining themselves as a different community.
- Following the division of Korea, both the ROK and the DPRK tried to realize the Gellner's nationalist principle (the congruence between the national and the political boundaries) by changing the political boundaries of two Koreas. That is, by unifying two Koreas, they tried to make the political boundaries of their regime congruent with the national boundaries of the Korean nation.

이론적 함의

- 김일성은 한국전쟁을 통해 정치적 경계의 변화 시도
- 이승만도 북침을 거론하며 정치적 경계의 변화 시도.
- Under the Cold War situation after the Korean War, however, this option (to realize the Gellner's nationalist principle by changing the political boundaries) could not be realized.
- In this circumstance, the above examination implies, South Koreans tried to realize the Gellner's nationalist principle by adjusting the national boundaries to the political boundaries of the ROK, that is, by imagining South Koreans as a different national community separated from North Korean compatriots.

감사합니다!

세션 1

한국전쟁의 유산

유엔사 규정(UNC Reg.) 유엔군사령부의 DMZ 관리

한모니까(서울대)

‘유엔사 규정’(UNC Reg.)과 유엔군사령부의 DMZ 관리

한모니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목차

시작하며

- 1. DMZ 관련 유엔사 규정의 종류와 특징**
- 2. DMZ 출입통제 관련 규정의 구체화와 적용 범위의 확대**
- 3. DMZ의 무장화(militarization)에 관한 사후적, 소극적 명문화**

맺으며

2

시작하며

▪ 한국전쟁의 유산: 정전협정과 DMZ

- 정전협정: DMZ와 한반도 정전 관리의 근간
- 정전협정의 구성:

서문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제2조 停火 및 停戰의 구체적 조치
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제4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제5조 부칙

- 'DMZ는 정전협정에 따라 관리된다/될 것이다'라는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인식. 나아가 한반도 정전도 정전협정에 따라 관리될 것이라는 인식.

3

시작하며

질문의 배경

(1)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들

- "안전상 이유", "규정 위반"
- 예: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정부대표단의 고성 GP(경계초소, 감시초소) 방문 불허(2019. 6), 통일부장관의 대성동 방문시 동행 취재진의 방문 불허(2019. 8), 한국 지상작전사령관과 미국 7공군사령관의 철원 GP 방문에 대한 출입 규정(48시간 전 유엔사 승인) 위반 논란(2019. 12)
- 규정? 유엔사가 제시한 통제의 명분 및 이유는 안전상의 문제, 그리고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가 아니라)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유엔사는 정전협정상 출입 통제 권한 행사가 정당하다는 입장.

4

시작하며

질문의 배경

(2) 정전협정 핵심 조항들 사문화

- 기존 연구: 이문항(2001), 박태균(2003), 최철영(2004, 2010), 한모니까(2019)
- “정전협정... 쌍방간의 합의가 아닌 행위를 통해 무실화” “한반도의 적대쌍방을 규율하는 어떠한 당사자간의 합의규범도 존재하지 않는 공백상태를 야기”(최철영, 2010, 170쪽, 174쪽).
- 예: 한반도 내 적대행위 완전중지 및 보장(제12항), 한반도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 및 군사무기 반입 금지(제13항), 군사정전위원회(제2조 제24항), 제13항과 제28항을 감독, 감시, 시찰, 조사하는 중립국감독위원회 기능(제2조 제36항, 제40항, 제41항, 제5조 제61항)
- **DMZ의 무장화(militarization), 긴장 고조, 적대행위와 직결. 정전협정 위반 사항.**



«동아일보» 1963. 7. 26



«경향신문» 1967. 12. 25



박종우, «중앙일보» 2018. 6. 27



«뉴스1» 2019. 7. 1

시작하며

질문의 배경

(3) 정전협정 체결 당시 예측하지 못한 정세 및 환경의 변화

- 정전협정 체결(1953. 7. 27) 이후 수십 년간의 예상치 못한 정세 변화들
- DMZ 방문 목적의 변화와 방문자 수의 증가
: 적대행위 및 군사적 목적이 아닌, 교육적, 학문적, 정책적 목적의 방문 증가.
“정전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정전협정 서문)
- 정전협정으로 DMZ 관리 가능한가?

시작하며

질문

- DMZ에 정전협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 정전협정의 실제 적용 및 작동의 과정, 그 매개 등을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 유엔사 규정(United Nations Command Regulation. UNC Reg.)
 - 존재와 역할, DMZ 출입 통제와 비/무장화(de/militarization)에 관한 규정들
 - 유엔사 규정?
 -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 권한 행사 및 통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
 - 정전협정의 핵심은 DMZ의 적대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비무장화, 그리고 이에 대한 유엔사의 관리로 보아야. 그렇다면 유엔사 규정은 비/무장화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7

1. DMZ 관련 유엔사 규정의 종류와 특징

8

1) 유엔사 규정의 종류와 개정

- 「유엔군사령부 규정 551-4: 군사작전 - 한국 정전 협정 준수 -」(2019. 5. 13)
 - 적용 시기: “유엔군사령관이 인정하는 정전협정 기간 동안” (정전협정 서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 적용 대상: “출입과 관련된 모든 사람”
- 「유엔군사령부 규정 551-5: 군사작전 -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안보견학 -」(2015. 3. 24)
 - 판문점 유엔사군정위 본부구역,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웨덴/스위스 캠프, 도라 전망대, 제3땅굴
- 「유엔군사령부 규정 551-6: 군사작전 - 유엔군사령부 비무장지대(DMZ) 안보견학 -」(2016. 11. 21)
 - 유엔군사령관의 DMZ 안보견학장 운영을 위한 책임과 절차를 규정. 유엔군사령관이 모든 DMZ 안보견학장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승인권자
 - 승인 견학장: 도라전망대, 제3땅굴, 상승전망대, 태풍전망대, 열쇠전망대, 제2땅굴, 백골전망대, 용양보, 승리전망대, 칠성전망대, 제4땅굴, 을지전망대, 금강전망대 등 13개소.
- 「유엔군사령부 규정 525-2: 군사작전 - 대성동 민사행정 -」(2019. 4. 1)
 - 대성동 작전구역에 출입하거나 거주하는 모든 인원에 적용
 -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대성동 지역의 정전협정 준수와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감독

9

2) 유엔사 규정의 종류와 개정

▪ 개정의 추이와 배경

- 1981~2019년 최소 6회 개정. 특히 2000년대에 개정 빈번. 2010년대에 최소 4회 개정.
- 배경: DMZ의 성격 변화에 관한 사회적 요구 및 논의 활발, 한국정부의 DMZ 및 대북정책 변화, 유엔사의 재활성화(Revitalization)
- 출입통제 관련 절차의 세분화, 중화기 및 확성기 배치의 사후적 명문화, 유엔사와 한국군의 관계 설정

유엔사 규정 551-4 개정 일자	대체 규정 일자
1981. 1. 19	*알 수 없음.
1986. 4. 25	1981. 1. 19
2003. 9. 22	1986. 4. 25
2014. 9. 5	*알 수 없음.
2015. 6. 4	2014. 9. 5
2018. 7. 27	2015. 6. 4
2019. 5. 13	2015. 6. 4

10

2) 유엔사 규정의 특징

▪ 목적

“정전협정 준수라는 유일한 목적의 달성을 지원함에 있어 모든 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지침과 정보를 제공”

“유엔군사령부 사령관의 전반적인 책임을 기술하고 실행”

▪ ‘군사작전’으로서의 규정

- DMZ 출입이나 ‘안보견학’ 등 DMZ 관련 유엔사의 활동을 모두 군사작전으로 규정.

▪ 규정 스스로 절대적 위상을 부여함

“각 지휘관은 모든 인원이 정전협정은 물론 유엔사 규정의 세부사항을 숙지하도록 해야”

“부대는 유엔사 규정들의 최신판 사본을 비치하고 준수해야”

“DMZ 안보견학장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 육군 보병사단, 551-6과 551-4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보견학장 인종 철회”

11

2) 유엔사 규정의 특징

예)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의 비무장지대 점검사항(551-4, 2018, 8-6)

정전협정 의무사항	점검사항
유엔사군정위가 승인하지 않은 비무장지대 출입 및 군사분계선 통과 금지 (정전협정 제7, 9항)	유엔사 규정 551-4에 따라 모든 비무장지대 진입로 상에 남방한계선 표식물이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가?
	유엔사 규정 551-4에 따라 항공기 월경 방지 경고 표지판이 적절히 설치, 관리되고 있는가?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비무장지대 출입신청서를 유엔사군정위에 제출하고 있는가?
	비무장지대 내 모든 인원들이 유엔사 규정 551-4에 따라 적절한 승인을 받았으며, 규정된 표식을 착용하고, 적절한 경호를 받고 있는가?
	관할 안보견학장이 유엔사 규정 551-5와 551-6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가?

12

2. DMZ 출입통제 관련 규정의 구체화와 적용 범위의 확대

13

1) 정전협정 제7~9항에 대한 두 가지 견해

▪ 정전협정의 DMZ 출입 통제 조항(제7~9항)

-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수 없으며(제7항)
- 그가 들어가려고 하는 비무장지대 지역 사령관의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으며(제8항)
-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관련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 허가 인원을 제외하고는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이 허가되지 않으며(제9항)
-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관련 인원수는 쌍방 사령관이 책임진다(제10항)

▪ 출입 통제 조항에 관한 두 가지 견해

(1) DMZ 출입 통제에 관한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을 절대적인 것으로 해석

(2) 정전협정 서언에서 밝힌 정전협정의 포괄적 목적과 제한에 부속됨을 강조하는 해석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무력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정전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

→ 제7~9항은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유엔사는 (1)의 입장을 고수.

14

2) DMZ 출입 통제 관련 유엔사 규정

▪ 출입 허용 인원 및 출입신청 관련 규정 551-4의 변화

- 551-4, 1986

- 공동경비구역을 포함한 비무장지대 방문객(24시간 전 방문허가 신청)
- 정전협정 후에 이루어진 합의 사항들은 쌍방이 공식 승인을 받은 보도기관 대표가 정전협정 이행에 관해서 취재할 수 있도록 함(서면 또는 전화로 인가)

* 대한민국 국민은 일차적으로 경찰서의 신원조회를 거침. 신원조회 신청 책임은 해당인과 소속기관.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15

2) DMZ 출입 통제 관련 유엔사 규정

▪ 출입 허용 인원 및 출입신청 관련 규정 551-4의 변화

- 551-4, 2018

- 유일하게 예외가 적용되어 비무장지대 방문이 허가되는 인원은 유엔사 규정 551-5 및 551-6에 의거하여 인가된 안보견학장을 안보견학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인원들뿐이다.(3-1-d)

•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들이 (중략), 해당 비무장지대를 책임지는 전방사단을 통해 출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방사단은 이 신청서를 유엔사/연합사 작참부/지구사 작참부 지상작전과에 제출한다. 지상작전과는 의견을 첨부하여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참모협조를 실시한다.(3-6-c)

• 언론사 인원이 포함된 출입신청서는 출입예정일로부터 최소 72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소속과 취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언론사의 출입신청서는 유엔사 공보실을 통해 처리된다. (3-6-d)

• 모든 비무장지대 출입 신청서는 출입예정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전까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접수되어야 한다.(3-6-e)

- 출입 신청 절차 및 방법을 세분화함. 한국의 신원조회 절차는 삭제되었지만, 출입신청서 제출기한 및 유엔사의 직접적인 관리 증가

16

2) DMZ 출입 통제 관련 유엔사 규정

▪ 출입 통제 승인 권한에 관한 규정

-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의 승인(551-4, 2018)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은 유엔군사령관의 대리인”(3-8-a)
“유엔사가 통제하는 남측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권한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에게 있다”(3-6-a)
-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 강인순 육군 소장
유엔사군정위 비서장: 버크 해밀턴 미 육군대령

17

3) 유엔사의 남북관리구역 규정

▪ 남북관리구역 설정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2000. 11. 17);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2002. 9. 12)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남북군사보장합의서’ 2002. 9. 17);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 합의서」(‘남북관리구역통행합의서’ 2003. 1. 27)

「2000년 11월 17일자, 2002년 9월 12일자, 2002년 9월 17일자, 2003년 1월 20일자 정전협정 후속합의서들에 명시된 “군사적인 문제” 관련 한국 국방부-유엔사 간 약정」(551-4, 2018, 5-2-b).

▪ 북한과 유엔사의 입장 차이와 귀결

- 북, ‘(남북)쌍방이 협의 처리’ 주장 vs. 유엔사, ‘정전협정에 따라’ 주장

“이 구역에서 제기되는 군사적인 문제들을

정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의 군대들 사이에 협의 처리”

- 한국, ‘한국은 관리권을, 유엔사는 관할권을 보유’ 또는 ‘사실상의 관할권 이양’로 이해

18

3) 유엔사의 남북관리구역 규정

▪ 유엔사 규정 551-4(2018), 제5장 남북관리구역

- 영문표기: Transportation Corridors(TC)
- 남북관리구역은 북한과 한국 간 화물 및 인원 수송을 목적으로 양측을 도로 및 철도로 연결한 비무장 지대 내의 특수 구역이다.(5-1 개요)
- 남북관리구역 내 남측지역 출입 및 군사분계선 통과가 유엔사의 사전 승인 사항(5-2)
- 정전협정 제반 조항이 적용된다(5-2-b)
- 현장에의 정전 사안 관련 권한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임명한 대리인인 관리구역 통제장교들에게 위임(5-2-b)

19

3) 유엔사의 남북관리구역 규정

▪ 통제반(Corridor Control Team)과 한국군 운영단(Military Operations Group)

- 통제반: 유엔사 회원국 인원들로 충원된 통제장교로 구성
- 한국군 운영단: 경비와 상황실 운영, 통행 신청서 및 통지서, 북한군과의 통신 등을 통제반에 전달

▪ 군사분계선 통행 신청 처리

군사분계선 출경 및 입경 신청서를 다수의 기관들이 처리 (..) 이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

통일부에 제출된 신청서는 한국군 운영단의 검토를 거쳐 관리구역 통제반에 48시간 전에 접수되어야 하며, 한국군 운영단은 군사분계선 통행에 관한 유엔사군정위의 승인을 받은 후에 북한군에 신청서를 전달할 수 있다(5-5-a)

▪ 남측 관리구역 출입 신청 처리

반드시 최소 96시간 전*에 관리구역 통제장교 또는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제출되어야(5-6-a)

* 남북관리구역 설정 과정 및 주체: 유엔사-북한, 남-북, 남(국방부)-유엔사

* 유엔사 규정에서도 유엔사의 사전 승인, 남북 통신 내용 유엔사에 보고

20

3. DMZ의 무장화(militarization)에 관한 사후적, 소극적 명문화

21

1) 정전협정, DMZ의 비무장 개념과 조치

▪ DMZ를 '비무장 상태로 되돌린다'

①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 내에 일체 군사역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하고 ② 모든 폭발물, 지뢰원, 철조망 및 기타 위험물은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고, ③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 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 지시와 감독하에 비무장지대 내로부터 제거한다.(정전협정 제2조 제13항 (ㄱ))

→ 기존의 군사 시설 및 장비의 제거가 비무장의 첫 단계임을 제시.

▪ DMZ의 '비무장 상태를 유지한다'

“양측 모두 DMZ 내에서, DMZ로부터, DMZ를 향해서 어떠한 적대행위를 감행하지 못한다”

(정전협정 제1조 제6항)

- DMZ의 출입자, 인원, 휴대 무기, 출입 목적 등 제한

: 민사행정 구제사업 집행 관련 인원, 군사정전위원회 허가 인원, 민사행정 경찰 출입 가능.

22

2) 출입 허용 인원의 무장화

▪ 군사정전위원회의 군인 출입 허용과 정전협정의 균열

- 군사 경찰을 민사 경찰(Civil Police)로 사용.(제3차 회의. 1953. 7. 30)
- 민사 경찰의 휴대 무기 제한: '방아쇠를 잡아당길 때마다 총탄 1발 이상 발사할 수 있을 정도의 보총과 권총' 자동식 무기 포함하지 않음.(제4차 회의. 1953. 7. 31)

▪ 이후, 민정경찰 표식을 단 무장 군인의 출입, 민정경찰 관련 군사시설물의 강화, 화기 배치

23

2) 출입 허용 인원의 무장화

▪ 유엔사 규정, 민정 경찰의 정의와 운용 목적의 군사화

- 민사행정 경찰(Civil Police)(정전협정 제1조 제10항; 551-4, 1986,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2)
- **Civil/Military Police**(551-4, 2018, 2-3-a)

비무장지대와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의 유지 및 관리를 포함한 경비와 민사행정 그리고 구호를 실시하기 위해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의 유엔군측 '을'구를 포함한 비무장지대/한강하구에서 비무장지대 민정경찰을 사용하며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의 유엔군측 '갑'구에서 공동경비대 유엔군측 성원을 사용하는 것은 사건을 방지하고 정전협정 위반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상군이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 (551-4, 1986, 책임-3-가)

비무장지대 민정경찰은 최전방 지상군 부대로서, 정전협정 위반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본 규정상 비무장지대 민정경찰의 역할은 비무장지대 내 경계초소(GP), 관측소(OP) 및 유엔군사령부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군 및 미군이 수행한다. 비무장지대 민정경찰은 경계,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운용된다. 이는 유엔사 측 군정위 본부구역 '갑'구 및 '을'구의 유지 및 통제를 포함한다. (551-4, 2018, 2-3-a)

24

3) 군사시설물의 강화와 GOP철책의 전진

▪ **GP** (경계초소 Guard Post), **OP** (관측소 Observation Post), **GOP** (일반전초 General Outpost)

▪ **유엔사의 GP/OP 규정**

- DMZ 내에 있는 구조물(551-4, 2003, 8-58-c), 민정경찰 부대들에 대한 방호 및 경계를 제공
- 북한군에 대한 감시, 침투 시도 차단, 민정경찰의 은신처와 경비 제공 등이 주된 목적(551-4, 2003, 8-58-a)
- 본질적으로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유사하게 관리되고 훈련되며 장비가 갖춰져야(551-4, 2003, 8-58-d).
- GP는 북한군 침투시 전투 진지로 활용될 것을 주목적으로, OP는 DMZ 관측을 주목적으로 하는 구조물(551-4, 2018, 8-3-b)

25

3) 군사시설물의 강화와 GOP철책의 전진

▪ **GOP 철책의 복상 및 남방한계선과 분리**

- 일반적으로 'GOP철책=남방한계선'으로 알려져 있음.
"DMZ로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551-4, 2003, III-13-b)
"북쪽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고 북한군의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 세워진 장벽"(551-4, 2018, 3-1-c).
- GOP철책의 복상
"남방한계선 철책이 지형 때문에 정확히 MDL로부터 2km 떨어진 남방한계선 철책 설치가 불가능해 졌다"(551-4, 2003, III-13-b)
"GOP 철책의 2/3가량이 DMZ 내에 있어 남방한계선의 위치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지만, DMZ는 어디까지나 정전협정 제2권(지도)에 명시된 공간"(551-4, 2018, 3-1-c)
- **DMZ 실제 면적의 축소, 유엔사의 관할 영역 그대로, DMZ의 무장화 확대**

26

3) 군사시설물의 강화와 GOP철책의 전진

▪ DMZ 내 시설물 승인 책임

“방책 및 철책 그리고 요새진지들과 유행 철조망의 보수 및 축조 등 정전협정과 관련된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모든 건설 활동은 하나하나 유엔군사령관의 특징적인 인가를”(551-4, 1986)

“유엔군사령관이 비무장지대 내 공사 승인 책임을 유엔사 작참부장과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에게 위임. 유엔사 작참부장은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개선공사나 교체공사를 승인하고,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은 신규 시설이나 군 작전병력을 확대하는 시설, 비무장지대의 요새화나 무장화를 강화하는 시설을 승인하는 권한을 맡고”(2018, 3-5-b)

27

4) 화기 및 화성기 설치 규정의 변화

▪ DMZ 내 화기 반입 규정의 변화

DMZ 내 민정경찰의 비자동소총 또는 권총 휴대 허가. 총기의 훈련 또는 시험 사격 불가 (551-4, 1986,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다. 총기사용’; 551-4, 2003, ‘20. 화기의 사용’)

- 개인화기를 비롯한 다종의 중화기 배치 허가

“개인화기(반자동 및 자동, K1, K2, K3), 중(中) 기관총(7.62mm), 중(重) 기관총(K6. 50 구경 및 K4 40mm 자동 유탄발사기), 무반동총(최대 57mm), 60mm 및 81mm 박격포, 유선 조종식 크레모아 지뢰, 수류탄”

(551-4, 2014, 3-10)

“DMZ 내 모든 무기 반입에 대한 승인 권한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있다.”(551-4, 2018. 3-10-c)

- 화기 배치의 명분

(1) 북한의 병력과 무기체계에 대한 대응 조치

(2) 한국군과의 합의: 한국 합참과 유엔군사령관 간 각서들

28

4) 화기 및 확성기 설치 규정의 변화

▪ 확성기 설치 및 철거에 대한 사후적 기술

- 2018년 확성기 철거 이후, 2017년 확성기 설치가 정전협정 준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명기(2018. 3-11)
- 한국 합참, 유엔군사령관에게 심리전 확성기 사용 승인 요청, 유엔군사령관 승인
<비무장지대 대북 방송용 확성기 승인>(유엔군사령관이 한국 합참에게 보내는 서한)(2017. 2)
- 2018. 4. 27 판문점 선언 이후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 중단 합의, 이후 확성기 시설 철거

29

맺으며

▪ 정전협정의 위상과 사문화

- DMZ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정전 관리의 근간, 정전 관리의 기본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
- 정전협정 체결 직후부터 사문화 진행. 특정 조항의 효력이 확대 유지(예: 출입 통제 관련 조항)

▪ 유엔사 규정의 위상과 역할

-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지침인 유엔사 규정이 절대적 위상을 점함.
- 정전협정과 후속 합의서들을 구체화, DMZ 현장에 적용. DMZ에 관한 실질적인 관리 및 운영 규정
- 유엔군사령관이 애초 정전협정에 명시된 군사적 목적을 벗어나 통제권을 광범하게 행사하는 근거가 됨.
- 정전협정이 금지했던 DMZ의 무장화에 대해서는 2010년대 이후 사후적으로 정당화함.

▪ 한국전쟁의 유산

- 한국전쟁은 정전협정과 DMZ를 낳음. 그것은 곧 DMZ와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존재와 위상의 문제.
- 남-북-유엔사 3자 관계라기보다는 북한-유엔사, 남-유엔사, 남-북 관계의 얽힘

30

참고논저

이문항, 2001 <<JSA-판문점 1953~1994>>, 소화.

박태균, 2003 <1950년대 미국의 정전협정 일부조항 무효선언과 그 의미> <<역사비평>> 63.

최철영, 2004 <남북간 군사적 합의와 한국 정전협정의 효력> <<성균관법학>> 16(2).

최철영, 2010 <전후법(jus post bellum)으로서 정전협정의 역할과 한계> <<민주법학>>

이상혁, 2017 <국군의 교전규칙 작성권한. 유엔사와 연합사의 작전권한 유무 및 범위를 중심으로> <<국방 정책연구>> 33(4).

김태헌, 2019 <유엔사의 DMZ와 MDL 통과 허가권에 대한 법적 검토> <<통일과 법률>> 39.

한모니가, 2019 <1960년대 비무장지대(DMZ)의 무장화 과정과 배경> <<사학연구>> 135.

한모니가, 2020 <유엔사 규정(UNC Reg.)과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DMZ) 관리> <<사회와 역사>> 125.

세션 1

한국전쟁의 유산

전쟁과 평화의 사회적 기원 : 한국전쟁의 다섯 가지 쟁점

김학재(서울대)

전쟁과 평화의 사회적 기원

: 한국전쟁의 다섯 가지 쟁점

김학재(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1. 한국전쟁과 냉전의 기원 Origins
2. 한국전쟁과 평화 체제의 성격 Type of war and peace
3. 한국전쟁과 동북아 지역 갈등 Regional Legacies
4. 한국전쟁의 트라우마 Collective Memories
5. 한국전쟁과 미래의 평화 Peace : Past and Future

요약

- 1) 냉전의 기원: 한국전쟁 시기의 미국과 중국, 2020년의 미국과 중국. 한국전쟁은 초강대국 냉전의 영향, 냉전은 17세기부터 시작되어 세계로 확산. 현재 미국과 중국은 외교적으론 갈등, 경쟁하지만, 경제적으로 상호의존, 각국내부 사회경제적 현실이 정치갈등과 외교 갈등으로 나타나는 중. 두 국가모두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고 도망치지도 못하는 중. 중미 관계의 외교적 노력뿐 아니라 각국 내부 상황을 더 개선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할 필요.
- 2) 냉전적 평화 체제의 한계 : 냉전시대의 평화와 판문점 정전체제의 한계.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이 억제와 균형을, 약한 고리에서 열전이 터지고, 국제기구의 개입으로 국가간 평화협정도 진행하기 어려웠던 산물로서의 정전체제. 더 완전한 평화 협정과 다자 평화 체제로 변화해야.
- 3) 냉전적 지역질서 : 한국전쟁 시기의 동북아 갈등과 최근의 동북아 갈등: 한국전쟁 전후로 미소갈등, 미중갈등, 중일갈등, 남북, 한일 갈등과 단교, 봉쇄가 발생. 탈냉전 이후 각국 수교와 정상화 교역. 2015년 이후 중일관계 악화, 2018년 남북관계 개선. 2019년 미중관계 악화. 현재도 동북아는 세계 3대 갈등 공동체로 분류(러시아, 중동, 동북아). 이제 달라져야.
- 4) 냉전적 집단 기억 : 전쟁의 트라우마와 집단 기억의 화해라는 난제. 동북아의 소위 '역사문제'. 식민지배, 태평양전쟁, 한국전쟁과 냉전. 한국전쟁은 서로 이긴 전쟁으로 집단기념. 국가의 공식기억이 더 강력. 국가간 관계가 악화될수록 더 공식기억화. 함께 추모하는 문화가 사회의 아래로부터 나오기 어려웠음. 건강한 경계를 만들고 함께 추모해야.
- 5) 새로운 위기와 새로운 평화의 과제 : 한국전쟁의 교훈. 이분법적 초강대국 중심 냉전서사의 파괴적 결과. 과거가 되어야 할 지연된 평화. 코로나, 환경, 로봇, 과장된 위기 시나리오에 휩쓸리지 말아야. 금융, 지정학, 감염병, 경제, 사회, 위기의 연쇄에 대해 더 잘, 함께 분석하고, 공동으로 조율하여 대응해나가야. 건강한 경계와 함께 존엄. 생존에서 사회성으로, 사회성에서 이성으로.

-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이 남긴 유산과 남은 과제들을 점검. 한국전쟁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다섯 가지 쟁점들을 중심으로

1. 한국전쟁과 냉전의 기원 : Regional Order

- 한국전쟁의 첫 번째 쟁점은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한 논쟁. 전쟁이 어디에서 기원했는가?
- 전통주의는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되었다는 관점. 수정주의는 전쟁 발발 자체를 어떤 과정의 ‘결과’로 보고 그 원인을 찾으려는 입장. 한국전쟁이 50년 6월이 아니라 그전 수년간 진행된 일들의 결과로 보려는 입장.
- 단순히 정치적 입장차이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어떤 현상의 원인을 표면화된 사건을 중심으로 단기적 시기의 행위자들의 구체적 판단과 결정들 보는 관점과, 어떤 사건 자체를 더 큰 맥락과 중장기적인 구조적 변화들과 관련해 인식하는 관점의 차이. 나아가 전쟁에 대해 사법적 판단, 사회과학적 분석, 자연과학적 설명이 다를 수 있음.
- 한국전쟁은 냉전의 산물. 냉전이란? 1947년에 트루먼 독트린으로 시작? NSC-68로 시작?
- 냉전사는 흔히 냉전의 기원을 1947년 유럽에서의 미소 간 긴장이 심화된 시기를 꼽지만,¹⁾ 미국과 소련이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며 그 힘을 확산해 나가다가 충돌한 것이 냉전이라고 본다면 그 기원은 적어도 1차대전 직후 유럽 국가들이 자기 파괴적 전쟁을 치르며 미국과 러시아가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1917~1919년의 시점을 그 기원으로 볼 수 있음.²⁾
- 더 나아가 유럽에서 근대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근대적 통합 이념의 등장을 추적해 보면 냉전의 역사적 기원은 14세기 서유럽과 동유럽의 격차와 불균형에서 시작된 것³⁾으로 볼 수도 있음.
- 이렇게 보면 동유럽의 끝에 러시아가, 서유럽의 끝에 미국이 19세기부터 발전하여 20세기에 충돌되는 과정은, 미국과 러시아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양대 이념을 대표하면서 냉전을 ‘국가화’했고, 2차대전 이후 양극 체제를 구축하면서 냉전이 ‘세계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은 ‘냉전이 열전화’된 것이고, 독일의 분단은 냉전이 주변국 세력균형으로 정리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음.
- 냉전의 해소 과정도 단순화하면 독일식(서유럽화)와 베트남식(탈중국 친미화)이 있음.
-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냉전의 영구화? 남북 분단과 전쟁, 2010년대부터 중미갈등으로 분단이 장기지속되고 협력 단절이 초래됨

1) 이동기, 「몰락에서 평화로 : 전후 유럽 냉전사」, 신옥희·권현익 외 『글로벌 냉전과 동아시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연구원, 2019) 9쪽 .

2) Sebastian Conrad and Dominic Sachsenmaier, *Competing Visions of World Order*, (Palgrave Macmillan, 2007), pp.213~29.

3) 대런 에스모글루, 제임스 로빈슨, 최완규 역,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서울: 시공사, 2012). 149~165쪽.

- 냉전과 탈냉전의 역사는 큰틀에서 보면 중심부는 30년전에 탈냉전이 이루어졌지만, 갈등이 더 폭발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쌓이는 주변부에선 냉전의 유산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⁴⁾
- 한국전쟁시기 전쟁의 배경에 미국과 중국이 있었다면, 2020년의 미중관계는 어떠한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미중관계의 영향력이 더 분명히 중요한 상수가 되어 가고 있음. 중미분쟁은 왜 발생했고,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 미중관계의 갈등은 일반적으로 피할 수 없는 지정학적 패권 경쟁의 관점⁵⁾에서도 볼 수 있지만, 소위 세계화의 발전으로 발생한 정치적 부작용인 ‘포스트 지구화’ 현상의 연장에서도 볼수 있음. 포스트 지구화란 지난 30여년간 세계적으로 지속된 지구화에 따른 경제 통합이 일부 국가에서 특히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외국인, 난민, 이주민 등 타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악화되며 자국중심주의와 정치적 분리주의, 우익 포퓰리즘이 부상하는 세계적 현상.⁶⁾
- 미국은 경제의 금융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고, IT 기업이 급격히 성장했으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더 심화되어 최근엔 중산층이 사라지고, 특히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백인 중년 남성의 어려움 증가하고 그 박탈감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낳는 결과로 이어짐. 토마 피케티는 1948~2016년까지 대선 결과를 분석해, 처음엔 공화당 지지자들의 교육 수준이 높았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었다는, ‘교육 격차와 정당지지의 역전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음을 확인. 그 결과 고학력 엘리트들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상위 소득 자산 보유 엘리트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형태로 정당 지형이 재편되었다. 또한 미국 사회의 인종구성이 변하며 1940년대에 비해 민주당에 대한 대부분의 지지는 백인이 아닌 흑인과 소수인종 유권자들로부터 나오게 됨.⁷⁾
- 즉, 미국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세계화의 수혜자들인 고학력 엘리트와 흑인 및 다양한 소수 인종의 지지를 받는 정당, 공화당은 상위 소득 자산 보유 엘리트와 세계화로 피해를 입은 저학력 백인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됨. 트럼프 대통령의 반중, 반인종적 태도와 그로 인한 미국 정치의 갈등은 정확히 두 정당 지지층의 갈등을 반영. 미국 내부 상황만 보자면 인종적 다양성을 포용하고 더 복지를 강화하는 정부가 출현해야하는 상황이지만, 금융화와 기술발전, 자동화로 인한 실직과 불평등의 심화, 경제적 양극화의 정치적 표출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치적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있음.
- 중국 역시 개혁·개방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음.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지도부는 이전처럼 경제성장만 강조하는 것을 넘어, 점차 중국 인민을 강조하고, 중국의 민족적 중흥을 강조하며, 중국의 민족적 조건, 애국주의, 문화주의와 독특성^{uniqueness}을 강조.⁸⁾ 특히 2012년

4) 냉전에 대한 설명은 김학재 (2020), “통합”, 『평화의 여러 가지 얼굴』,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7월 출간예정) 참조.

5) 그레이엄 앨리슨 (2017), 『예정된 전쟁』, 세종서적.

6) 이 현상은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한국사회의 여론에도 반영되고 있다. 김학재 (2020), “포스트 지구화 시대의 통일 의식” 『2019 통일 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학재 (2019), 사회적 평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경제와 사회』

7) 토마 피케티, 2020, 『자본과 이데올로기』, 문학동네, pp.865-895.

시진핑의 '중국몽'과 일대일로 정책은 개혁개방 30년 동안 누적된 국내의 불평등, 가치 변화, 부패문제로 인해 중국의 발전 방향에 대한 내부 노선투쟁이 발생하다가, 더 포괄적 정당성을 구축하기 위해 야심찬 대외 정책의 제시로 나아간 사례. 그러나 일대일로 정책이 미국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무역분쟁으로 경제성장에 어려움이 발생하자⁹⁾ 대외적으로도 홍콩, 대만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경직된 대응을 보임.

-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상호 교류와 관계 자체가 미국과 중국의 사회 내부의 변화와 맞물려 상호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과거의 미소 냉전과 매우 성격이 다름. 이념, 지배력, 경제 블록, 국가간 국력의 격차를 고려할 때 세계는 더 다극화되고 상호의존적으로 연결.
- 20세기 후반 힘이 커진 이후 미국은 세계로부터 도망갈 수도, 일방적으로 지배할 수도 없는 상황과 위치가 되었던 것처럼, 2020년 중국과 미국은 모두 일방적으로 지배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것이 과거의 냉전과 다른 점.
-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아이러니 하게도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제를 개방하고 교류 협력을 지속하며 상호의존이 심화된 결과. 미국에선 백인들이 불평등의 피해를 입자 자국 중심주의가 강해졌고, 중국은 국력 성장에 따른 자신감과 국내 불평등과 노선투쟁 등을 해소하는 더 큰 정당성을 구축하기 위해 팽창적 대외 전략과 경직된 국내 정책이 강화.
- 최근 미국과 중국은 중요 국가들을 동맹/파트너십으로 묶고, 양국 경쟁을 공식화한 전략 보고서를 공표하고 있지만, 미중 분쟁으로 수많은 국가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생각하면, 이를 단지 과거와 같은 냉전갈등이 아니라, 포스트 지구화 시대의 더 평화로운 세계 질서를 위해 미국, 중국 '내부의 변화', 그리고 미중 '관계의 변화'를 촉구해야 할 상황으로 봐야함. 미국과 중국은 지금 앞으로의 세계의 향방을 결정하고 책임있게 행동해야하는 대국.
- 결론적으로 한국전쟁의 배경엔 미국과 소련이 확산했던 세계 냉전, 중국과 미국의 지역냉전이 있었고,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30년간의 우호적 관계로부터 약화된 것이긴 하지만 과거의 미소 냉전과 다름. 미국과 중국은 지난 30년간 서로 교류하고 섞여 왔으며 전 세계가 바라듯이 더 나은 미국, 더 나은 중국이 세계의 평화를 보장해줄 것.

2. 한국전쟁과 평화 체제의 성격

- 한국전쟁의 두 번째 쟁점은 전쟁의 성격과 평화체제의 성격. 어떤 전쟁이고 어떤 평화인가?
- 전쟁사의 관점에서 검토한 한국전쟁과 평화체제의 성격은 다양한 개념의 전쟁이 물질화되고, 시대적 성격의 평화가 제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8)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중국 공산당의 제시한 8가지 이념적 과제들을 보면, 경제 발전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주의 원칙과 시장 경제의 모순이 심화되자 점차 민족주의, 국제주의적 정당성의 필요가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Jinghan Zeng (2016),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apacity to Rule_ Ideology, Legitimacy and Party Cohesion*, Palgrave Macmillan.

9) 국립외교원, 『2019 중국 정세보고』, pp. 79-141.

- 한국전쟁의 성격은 ① 총력전으로서의 성격과 ② 핵의 등장으로 시작된 냉전시기 공포의 균형 두 가지가 섞여 있음.
- 총력전은 1차대전 이후 등장함. 총력전은 탱크의 등장, 그리고 공중전과 전후방을 가리지 않는 전면적인 폭력의 등장으로 특징지어짐.

<표 1> 20세기 이후 전쟁과 평화의 개념과 성격 변화¹⁰⁾

	전쟁	평화
1. 2차대전 총력전	공중전, 지상전, 군사력 인종절멸(홀로코스트, 난징학살)	군사적 승리, 무조건 항복 민간인, 사회의 파괴와 말살에 대한 회복
냉전 한국전쟁	3차대전 우려와 핵개발 핵, 수소폭탄의 개발과 핵확산 우려 제한전, 심리전, 전복작전	유엔의 설립, 집단안보 강대국의 국제 경찰 국제 규범, 무장해제, 군축, 기술확산 차 단, 공포의 균형과 억제 두려움과 경쟁의 안보딜레마
새로운 전쟁	탈냉전 내전, 민간인학살, 난민, 비국가행위자, 국 가실패, 테러	개입, 중재, 인도주의 지원 인종, 종교, 집단 폭력과 화해, 치유
하이브리드 전쟁 코로나	정보전, 사이버전, 드론, 기후, 바이러스, 금융 위기후 우크라이나, 북한 중미 분쟁과 경쟁	복합, 퇴보, 새로운, ?

출처 : Lawrence Freedman, (2019)에서 필자가 정리

- 총력전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이후 이념에 의해 전쟁이 더욱 급진화됨. 공산주의와 파시즘 이념이 무력화, 급진화된 것이 스탈린의 소련과 히틀러의 독일, 천황제 일본이고 1, 2차대전은 추축국과 자유주의 진영의 이념-총력전으로 진행됨.
- 총력전의 시대를 맞아 일본은 러일전쟁 이후 해군력 증강했고, 해군력을 기반으로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킴. (당시 미국은 일본을 경제제재).
- 이어서 바다의 공중전 개념이 등장해 항공모함이 출현함. 이는 1941년 진주만 공격과 미국의 대응과정에서 현실화되었고,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미국을 이기려는게 아니라 동아시아 패권을 인정, 양보 받으려는 것이었음.
- 이런 총력전 군사력의 확장을 뒤바꾼 것이 핵무기의 개발. 1938년 물리학자들이 핵분열을 발견하고, 이 기술을 독일이 현실화시킬까 두려워한 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을 통해 미국에 전달함.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핵분열 지식에 대한 정보를 듣고, 영국과 함께 1942년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작했음. 그것의 귀결이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 그리고 1949년 8월 소련의 핵실험 성공에 이은 핵무기 경쟁이 시작됨.

10) Lawrence Freedman, 2019. *The Future of War : A History*, Public Affairs.

- 핵의 등장 이후 다시 전쟁 개념이 바뀌었음. 인류는 아무리 정당한 목적도, 이렇게 파괴적 수단을 사용해도 되는가하는 목적과 수단에 관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함. 기술발달로 인간의 힘이 너무 커지자 그 힘을 쓰는데 정당성 문제와 통제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던 것. 인간이 자신이 가진 힘에 대한 불안감(미숙한 행동으로 절멸을 촉발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공포의 균형과 억제, 군축과 집단안보 등 냉전시기 전쟁과 안보 개념을 결정함.
- 결국 냉전시기 이념 전쟁의 물질적 하부구조는 핵무기였고, 상부구조는 이념이었다고 할 수 있음.
- 냉전시기에 지속적으로 두려움에 기반해 방어와 보복을 위한 군사력이 성장했는데, 그것을 ‘펠 하버 시스템’이라고 부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대화로 해결하고 사전에 해소하려고 하기 보다, 적의 ‘기습’을 전제로 그에 보복하는 역량을 키우는 정보시스템과 방어기술¹¹⁾ 사전경고 시스템이 아무리 발달해도, 안전한 길은 국가의 방위가 공격 받은 이후에도 공격하는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방어 시스템이 진화.¹²⁾
- 냉전은 미국과 소련의 전쟁개념과 안보 개념이 경쟁하며 기능적으로 확산한 것.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구축되고 주로 중심부 국가들이 상대의 갈등을 방어하고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식으로 군사체제와 동맹체제, 안보 시스템이 확장되었음. 이는 마치 근대적 국가가 외부 갈등을 통제하기 위해 군사-행정 기능을 분화하여 팽창시키는 것과 같음.¹³⁾
- 미국과 소련의 냉전 갈등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냉전의 개념은 물질화되었음. 미국의 군비지출 역사를 보면, 최대 군비 지출의 세가지 정점이 있는데, 그것은 1950 한국전쟁, 1968 베트남전, 1986 신냉전-레이건이었음.
- 미국 군비지출 증가에서 1950년대의 특이성은, 50년대는 순수한 조세수입에 기반한 정부 지출이었다는 점. 그래서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내 여론이 2년간 우호적이다가 3년차에 악화됨. 트루먼은 재선에 실패함. 베트남전 시기엔 미국내 시민권도 상승하고 언론도 발달하여 미국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음.¹⁴⁾
- 한국전쟁의 세계적 영향은 미국의 NSC 48이 현실화되며 국방비 확대로 인한 냉전의 군사화, 유럽방위군의 탄생과 독일의 재무장으로 인한 NATO체제 출범의 시초¹⁵⁾, 중국의 참전으로 인한 동북아 냉전질서인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탄생과 2차대전 전후 질서의 산물인 유엔 안보리 중심 체제가 총회 영향력 강화로의 위상 변화 등이 있음(테이블)

11) Roberta Wohlstetter, 1962, *Pearl Harbor: Warning and Decis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Ron Robin, 2016, *The Cold World They Made*, Harvard University Press.

12) Lawrence Freedman, 2019: 90.

13) Rokkan, *Dimensions of State Formation and Nation-Building: A Possible Paradigm for Research on Variations within Europe*”, in Charles Tilly eds.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564-567

14) Robert Higgs, 2006. *Depression, War, and Cold War :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Oxford University Press. pp. 124~150. 전쟁과 여론과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Building the Cold War Consensus: The Political Economy of US National Security Policy : 1949~51*, Lee E. Ohanian (1997) *Macroeconomic effects of war finance*

15) 최형식, 『독일의 재무장과 한국전쟁』, /COW/ PRIO 통계

- 이렇게 고도 기술 군비경쟁이 시작된 냉전시기엔 핵무기가 개발된 상태에서 국가간 전면전은 거의 불가능했지만, 그럼에도 제한적, 예외적인 전쟁이 발발. 그것이 바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 한국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한국전쟁이 국제전이나 내전이나 하는 학술적 논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이는 사실 전쟁의 국제법적 책임과 관련된 논쟁.¹⁶⁾ 하지만 역사적 사례들 속에서 전쟁의 형태를 비교해 보면 한국 전쟁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음.
- 예컨대 중국의 경우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진행된 내전(1927~49)은 어떤 기준으로 도 명확한 내전. 미국의 남북전쟁도 대표적인 내전. 하지만 한국전쟁은 같은 민족이 미국과 소련의 영향을 받아 두 개의 국가(정부)를 세운 지 2년 만에 발생한 대규모 전면전으로, 순수한 내전도, 순수한 국제전도 아님.
- 한국전쟁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러시아 같은 유럽의 국민국가들이 자국의 군사력과 사회를 동원하여 전면전을 치른 1, 2차대전 같은 총력전(total war)과도 다름. 공중전, 지상전, 해상전과 적을 절멸하려는 수준으로 군사적 충돌이 격화된 것은 총력전과 유사하지만, 유럽에서의 세계대전이 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로 끝난 것에 비하면 한국전쟁은 어느 한쪽이 완전히 승리하지 못했고, 남과 북은 당시 국제사회로부터 주권국가로서 온전히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로 전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군사지원을 받았으며, 전쟁이 중국이나 일본으로 확산되지 않게 전장을 한반도로 제한하려 했고, 평화협정이 아닌 임시적인 군사 정전체제로 마무리. 총력전 같은 전통적 전면전의 양상을 띄었지만, 홀로코스트나 난징학살처럼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으며 군사 협상을 통해 마무리.
-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체제의 특징은 ①비무장 지대와 ②정전체제.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이 억제와 균형을 추구했지만 경쟁이 격화되며 약한 고리에서 열전이 터졌고 국제기구의 개입했지만 국가간 평화협정 체결하지 않고 DMZ을 설정하고 정전협정을 체결.
-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상태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출발은, 판문점에서의 긴 협상 끝에 1953년 7월 27일 합의된 정전협정. 정전 협상의 의제, 협상 진행, 전쟁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된 교착상태, 정전 협상 체결에 대한 연구들.¹⁷⁾
- 정전 협정 자체가 매우 어렵게 체결되었지만, 정전 협정(armistice agreement)은 말 그대로 임시적인 군사적 합의로서 온전한 형태의 평화 체제에 대한 외교·정치적 합의의 산물이 아님. 더 완전한 평화 협정과 다자 평화 체제로 변화해야함.

16) 한국전쟁 연구는 처음엔 전통주의 관점과 공식 군사사로 시작되었지만 1980년대 수정주의 관점의 브루스 커밍스의 연구가 등장했고, 한국에서는 박명림, 정병욱, 박태균 교수의 연구로 기존 주장과 사료에 대한 비판적 보완과 새로운 해석이 이어졌다. 중국의 셴즈화 교수는 중국 자료를 이용해 한국전쟁 당시 중국과 소련의 관계와 전략적 이해관계의 차이를 드러냈고 김학재는 한국전쟁의 전개와 종식 과정에 영향을 미친 평화와 관련된 국제법의 쟁점과 정전체제의 형성 과정을 분석했다.

17) 김보영 (2008),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학재 (2015), 『판문점 체제의 기원』, (서울: 후마니타스) Foot, Rosemary. *A Substitute for Victory: The Politics of Peacemaking at the Korean Armistic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Bailey, Sydney D. *The Korean Armistic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2. United Nations Command, *Korean Armistice Negotiations 1951~1953*(국사편찬위원회, 1994, 『남북한관계사료집』 1~10권).(휴전회담 회의록)

- 양자간 평화협정을 넘어 다자간 평화안보 질서의 한 사례는 유럽에서 진행된 집단적 평화-화해 프로세스. 헬싱키 프로세스. 헬싱키 프로세스는 아젠다를 설정하는데만 4개월 걸렸고, 실제 협상진행에 3년 걸림 1975.8.1.에 34개국 지도자가 모여서 (구속력 없는) 합의문을 공표, 그래도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구속력이 없어도 대체로 모두 현실화 되었기 때문.
-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관계와 국가간 신뢰, 공유된 문화가 있으면 반드시 강력한 규범이 없어도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지만, 실질적 관계와 신뢰와 문화가 없으면 아무리 강력한 규범도 지켜지지 않음. 미국과 중국이 관계를 만들고 규범을 공유하지 않으면, 남과 북이 관계를 만들고 신뢰하지 않으면 부정적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음. 총력전과 핵-냉전의 산물인 한국전쟁, 임시 군사정전 체제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지정학적인 외부의 갈등을 남북의 갈등, 사회 내부의 갈등으로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매우 비극적.

3. 한국전쟁과 동북아 지역 갈등 Regional Legacies

- 한국전쟁의 세 번째 쟁점은, 한국전쟁의 유산으로 형성된 동북아 지역질서의 문제임.
- 한반도 주변에서 근대적 민족국가가 형성되는 과정과 그것이 팽창하여 충돌한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근현대 동북아시아의 지역 질서(regional order)의 특이성을 인식할 수 있음. 한반도는 수세기에 걸쳐 지역질서를 유지한 중국과 19세기 후반 지역강국으로 부상한 일본, 1차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과 러시아가 영향력과 세력권을 투사하여 만나고 있는 지역임. 초강대국, 지역강국, 중소국간 계층화된 위계질서와 다른 지위가 특징.¹⁸⁾
- 한국전쟁 이전에 이미 동북아 특유의 지역질서가 있었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며 20세기 후반 동북아시아 국가간 질서의 기반이 형성되었음. 한국전쟁으로 형성된 동북아 냉전질서는 1) 중미 불인정과 갈등 2) 한반도 정전 체제 3)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세가지 축으로 구성됨.¹⁹⁾ 따라서 아시아의 냉전과 유럽의 냉전은 다를 수밖에 없고, 한반도 냉전 질서는 매우 특이하고 뚜렷한 강대국 충돌의 산물.

<표 1> 한국전쟁으로 형성된 동아시아 냉전 질서의 특징

대상국	쟁점	미국 대외 정책	특성과 위상
중국	신중국 승인, 유엔가입	NSC34, NSC41 불인정	정치적 불인정
한국	한국의 휴전과 평화적 해결	NSC95, 군사정전	군사적 균형
일본	타이완문제, 2차대전 전후처리	NSC48, 60 초기 평화협약과 방위동맹	경제적 편입 특수 동맹

출처 : 김학재 2015 『판문점 체제의 기원』, p. 356

18) 신옥희 (2020),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한미일 위계성 구성”,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점검과 동아시아 대안적 지역체제의 모색』 IPUS-한국냉전학회 공동학술회의. Sung Chull Kim, *Partnership within Hierarchy: The Evolving East Asian Security Triangle*

19) 정병욱 (2020), “한국의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 참가문제와 배제과정”, 남기정 (2020),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한일관계: 한일냉전의 기원”,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점검과 동아시아 대안적 지역체제의 모색』.

- 이 질서는 1970년대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베트남전으로 세계적 반전여론이 대두하고, 그것이 70년대 데탕트로 나아가자 미국과 소련, 미국과 중국이 화해하기 시작했음. 특히 1978년 미국과 중국의 화해는 동북아 냉전질서의 한 축을 변화시킴. 이후 30년간 미국과 중국의 호혜적 협력이 지속되고 중국은 개혁개방을 지속함.
- 1980~83년에 소위 신냉전 시기가 있었지만, 1987년 미국과 소련이 INF협약을 체결하고 소련이 변화하며 지구적 차원에서 탈냉전이 이루어짐.
- 동북아 냉전질서의 두 축인 한반도 정전체제와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지속되고 있었지만, 1990년대 남북관계가 개선되며 남북 화해 협력의 시기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한중일간에 상당히 오랫동안 교류 협력이 지속되며 1990년대에는 아시아 공동체, 아시아의 시대 담론이 부상함
- 하지만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면서 1986년 플라자 합의로 일본 경제의 팽창이 꺾이고, 1990년대 미국의 반일정서가 대두되었으며, 중국이 부상하면서 2000년대 미국의 반중정서가 대두됨.
- 동북아에서 **미국, 중국, 일본간의 갈등과 경쟁이 본격화됨**. 이 과정에서도 중일, 한일간 다양한 화해와 협력의 계기가 있었지만, 2015년경 이 과정이 중단되고 상호 갈등이 심화됨
- 중일 갈등이 심화되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다시 미국과 일본이 밀착하고, 중국과 미국이 갈등하는 양상이 시작됨. 2015년 4월 아베의 미국 방문시 아베는 일본, 미국, 인도, 호주 4개국 동맹 구상을 제시했으나 호주는 반대했고 인도도 반응이 없었음. 하지만 2015년 4월 아베의 미국 방문으로 미일 동맹을 강화함.
- 2015년 9월 중국은 역대 최고 종전 기념행사를 개최함. 중일 공동 역사연구위원회는 난징 문제로 충돌하여 합의를 못했음. 난징 학살문제는 원래 1960-70년대 일본 진보학계와 언론이 난징 학살문제를 보도하고 연구한 것에서 밝혀지기 시작했음.²⁰⁾
- 아베는 2015년 8월 15일 종전 70주년을 맞이해 무조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몇 개월에 걸쳐 준비하고 조금더 전략적으로 움직일 그림으로 일본의 침략행위와 식민주의를 사과함. 그 말의 마지막에 ‘앞으로 우리의 자녀와 손주, 이후에 이어질 세대가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사과하도록 강요받아서 안된다.’
- 하지만 9월 2일 시진핑은 열병식. 일본의 잔혹행위를 조목조목 열거. 항일전쟁을 공산당의 성과로. 그리고 2016년 5월 오바마가 히로시마를 방문하자, 왕이는 ‘히로시마는 중요하다’ 하지만 난징은 더 잊혀서는 안될 장소이다²¹⁾

20) Richard McGregor, 2017, Asia's Reckoning (송예슬 옮김, 메디치) p.481.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교과서를 출간하는데 50년 걸렸음.

21) McGregor, 2017, pp. 488-491.

- 일본에서는 배상금 청원운동이 제 3단계로 접어들. 피해자. 변호사 소송. 중국 사법체제 배상운동 시작. 2014년 중국 법원이 미쓰이 상대 소송 수용. 미쓰이는 2900만달러 지불에 합의. 민사분쟁으로 주장.
- 미국은 동맹간 버든 쉐어링 관점에서 일본의 군비 지출 증가 강조. 일본의 최대 규모 이스모. 요코스카에 정박. 제임스 메티스는 2017년 2월 일본을 방문해 '일본이 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국방부는 미일 동맹의 가치를 높게 평가.
- 1990년대 이후 중국은 인접 14개국과 국경 협상 착수. 아시아태평양 군사작전을 지휘한 해군 제독 H.H.는 중국은 분쟁 해역을 군사화하고 있다고 비난.
- 트럼프 집권후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은 무산 TPP도 무산. 일본은 트럼프 당선으로 혼란을 겪었고,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군사 도발. 랴오닝 전단 이끌고 항행.²²⁾
- 중국이 G2로 부상하자 미국-일본 동맹 강화와 주변국들의 유동적 변화가 발생. 그 과정에서 2017년 최악의 북미 관계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개 북미 관계와 회담이 전개. 2019년 트럼프 정부와 시진핑 정부가 충돌하며 G2 무역, 기술 전쟁 전개. 한일 사이에 한국 반도체 제재, 무역분쟁 발생.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산물인 한미일 삼각동맹이 버든쉐어링과 commitment의 관점에서 붕괴하기 시작.²³⁾
- 이렇게 한국전쟁으로 결정화된 동북아 냉전질서의 두 축인 한반도 정전체제가 2018년 이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변화하려 하고, 샌프란시스코 체제 역시 기존과 달리 유연하게 변화되던 상황은 30년간 이어진 중미관계 개선이 한중일, 남북관계 개선의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임. 적대적, 갈등적 상호의존에서 협력적 상호의존의 선순환이 만들어 지려 했음.
- 하지만 미일 관계가 군비 부담 협상 관계가 되고, 중미 관계도 경쟁과 갈등으로 나아가자 중일관계, 남북관계도 다양한 갈등 압력을 받으며 다시 냉전질서의 두 축도 악화.
- 중미간 수교와 화해로 상호 협력이 심화되어 긴장이 완화되던 시기에는 동북아 국가간 관계가 비교적 평화로웠지만, 2015년이후 중일 갈등이 심화되며 미일 밀착이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북중 밀착과 한미일 밀착이 진행되자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악화되었음.
- 2018년 평창 올림픽 이후 2년간 숨가쁜 노력으로 평화프로세스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을 직접 추구했음. 이 과정에서 한국전쟁 정전체제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수교로 이어지는 북미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려 했음. 미국과 중국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호의적이었음.
- 하지만 2019년 미중 분쟁이 심화되었고, 상대적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며, 주변국 관계가 경직되어 비핵화-제재 문제로 북미 대화, 남북 교류 협력이 어려워지기 시작.

22) Mcgregor, 2017: pp. 495-509.

23) 김성철,

- 큰 틀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되면, 그 압력이 남북관계, 중일관계에 영향을 주고 평화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없음.
- 한국의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일관계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며 다시 선순환 흐름을 만들고, 남북일이 중국, 미국과 협력하여 중미 갈등을 완화할 것을 촉구할 수 밖에 없음.
- 하이퍼 지구화의 부작용 따른 사회경제적 어려움 증가로 협소한 방어적, 경쟁적 외교정책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혜로운 아시아는 19세기 유럽이 범했던 실패의 사례를 반복하지 말아야. 패권 경쟁,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보다 진정한 의미의 희생자들에 대한 사죄와 치유와 정의를 위한 방법을 모색. 구질서의 스산한 파편과 종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관계와 미래를 만들어낼 능력
- 지구상 마지막 탈냉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간, 중일간, 불필요한 잠재적 군사갈등의 예방을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려해야. 남북이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이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면 세 국가 모두에게 채널이 두 개씩 더 늘어나는 것.
- 현재 동북아는 세계 3대 갈등공동체로 분류되며²⁴⁾, 동북아 국가간 다양한 갈등이 누적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다자회의의 제도화를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시기. 동북아 다자회의의 경우 일반적 다자회담과 달리 미중, 러일, 남북 등 초강대국, 지역강국, 중진국, 등 국가간 균형이 잘 맞지 않는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해야하는 난점. 동북아에서 국제기구를 구축할 때 권력구조, 분담, 책임, 의사결정 방식의 다층 복합적인 디자인을 고민해야. 무엇보다 동북아 다자기구가 중미의 패권 전장이 되지 않게 하려면, 힘의 균형과 책임, 분담, 상대적 약소국의 권리, 의사결정과정, 의제, 실익 등이 잘 고려되어야²⁵⁾
- 6개국 사이에 미중 양자 정상회의와 실무회담. 3자 정상회의, 4자 위원회, 6자 실무 위원회, 6자 전원회의 등 다양한 층위에 안보, 군사, 경제, 금융, 과학, 사회, 화해와 교육, 문화체육 등의 의제에 대한 책임과 역할, 재정 부담과 책임, 숙의 절차와 국가별 표결 가중치 부여 방식을 고려해야. 중미가 공동안보문제를 다자회의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큰 업적

4. 한국전쟁의 트라우마 Memories

- 한국전쟁이 남긴 또 다른 유산은 전쟁의 트라우마와 집단적 기억.
- COW / PRIO 통계에 의하면 7년 전쟁과 나폴레옹 전쟁에서 1,100만명이 사망. 민간인을 고려할 경우 더 많아짐 한국전쟁에서 COW는 약 909,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지만, 민간

24) Heidelberg Institute for International conflict research, *Conflict Barometer 2018*

25) 2차대전후 유엔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 제도를 두어 안보문제를 다뤘으나 냉전시기 미소 입장차이가 발생하면 만장일치가 불가능해 수십년간 무력화 되었고, 가상화폐를 사용해 2차표결으로 집단 결정을 내리는 방식 (quadratic voting) 등 국제기구에서의 다양한 표결방식에 대한 연구를 참조. Eric A Posner et al 2014, "Voting Rule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OI:10.2139/ssrn.2383469

인을 포함하면 4백만명. 참고로 1차대전에서 미군 11만 6416명 사망 2차대전에서 40만 5,400명 사망, 한국전쟁에서 5만 4,487명 사망, 베트남전에서 58,153명 사망, 걸프전에서 376명, 아프간 침공에선 2명, 이라크 침공에선 140명 사망. p. 126-127

- 전쟁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기념하는 이유는 그 전쟁이 총력전이었기 때문에 온 사회가 파괴되고 사회에 기억들이, 상처와 상흔들이 남아있기 때문.
- 그런 점에서 전쟁을 치른 국가가 서로 그 피해를 기념하고 추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간 전쟁을 기념, 추모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례는 프랑스와 독일의 1차대전 추모
- 하지만 1, 2차 대전은 총력전으로 사회에 큰 트라우마를 남겼고. 무조건 항복으로 끝났기 때문에 공동의 추모를 통해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화해의 계기가 되었음
- 그런데 냉전, 한국전쟁은 공식 기념이 냉전으로 두 개의 기억이 만들어짐. 서로 대결하는 이념화된 공식기억. 자유진영의 기억, 공산 진영의 기억. 1) 중국의 항미월조 2) 북한의 반미제국주의 혁명 3) 한국의 반공주의 4) 미국의 해외 참전. 이렇게 모든 참전국이 이긴 전쟁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전쟁 기억의 화해가 매우 어려운 상태
- 오래된 상처는 억압되어 있고, 심리학적으로 오래된 상처는 몸에 각인, 건강한 사회심리의 관점에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관점이 필요. 한번의 큰 트라우마에는 새로운 좋은 경험들이 300번 이상 필요하다는 심리학 분석.
- 국가마다 전쟁 기념의 방식이 다름 1) 개인 - 가족 2) 열사 - 혁명 3) 군인 - 애국주의(국민군) 4) 영웅 - 전투, 승리, 지도자 5) 피해자 vs. 가해자 6) 참상이자 모두의 비극 7) 삶의 기록, 역사적 비극
- 각국이 승리로 기념하거나 망각했지만, 400-500만이 사망한 전쟁에서 승자가 있을 수 없음. 모두가 패자. 함께 추모하고 서로 위로해야. 남과 북. 중국과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으로 희생자 유해를 보낸 것도 그 일환. 남북이 공동 유해발굴을 한 것도 같은 맥락. 올해부터 한국전쟁은 승리를 기념하는 서로의 경쟁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비극을 되풀이 할수 없게, 비극으로 함께 추모하는 해로 삼을 필요. 3년간 서로 추모하고 위로하면서 화해의 미래를 열어야.
- 전쟁의 트라우마는 국가간 관계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침. 긴장상태가 높은 동북아 초강대국 사이에서 국가간 관계와 경계의 유형은 일종의 갈등으로 인한 '애착손상' 상황과도 유사함. 강대국간 갈등, 순응형, 의존형, 방어형, 지배형 관계가 존재. 보다 자율적인 태도보다는 과도한 불안, 의존, 회피 유형이 집단정서에 영향을 줌. 동북아 6개국 관계. 건강한 경계를 만들어 각자 지킬건 지키고 친밀한 협력 가능한 개방성도 유지
- 트라우마 치유와 화해의 중요성. 인간 뇌의 발달은 생존 -> 사회성 -> 이성적 대응. 트라우마에 직면한 사람의 뇌는 역피라미드로 발달. 이성이 약화되고, 사회성도 위축되며, 오로지 생존 투쟁과 경쟁만을 생각하게 됨. 트라우마의 부정적 효과는 늑대들의 무한 투쟁.

5. 한국전쟁과 미래의 평화 Peace : Past and Future

- 전쟁의 성격이 변하면, 추구해야 할 평화의 성격도 바뀌는데, 오늘날 전쟁의 양상, 갈등과 위기의 모습이 바뀌고 있음.
- 오늘날 미래의 전쟁을 예측하려는 다섯가지 학파가 있는데, 1) 첫 번째는 시나리오 학파 Scenario Development School로, 이들은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을 대상으로 군사력을 주시하고 의심하고 있음. 소련의 붕괴 이후 새로운 적을 찾으려는 것으로, 1990년대에는 일본을 2000년대 이후엔 중국을 2007년부터는 북한, 중국, 이란 등을 설정함,²⁶⁾ 2) 기술 학파 Emerging Technology School는 기술을 중시하며, 지속적으로 위협 지평을 검토하는 기술자들임. 3) 역량 평가 학파 Capabilities-Based Assessment School는, 전례 없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무기와 군사력을 동원하여 최적화시키는 거대한 군사력 toolbox를 만들어냄. 4) 신개념 전략 학파 New Concepts Masquerading as Strategy School는 'shock and awe, net-centric warfare, effects-based operations' 같은 새로운 전투개념을 만들어냄. 마지막으로 5) 글로벌 트렌드 학파 Global Trends School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유명한 지구적 우려(물 공급, 질병, 도시화)가 왜 전쟁으로 전환될수 있는지 우려하며 이를 미래의 군사적 위협으로 연결짓는 입장임 ²⁷⁾ 이런 관점에서는 오늘날의 전쟁은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사이버 전쟁, 로봇과 드론, 메가 시티와 기후 변화도 중요한 위협의 일부로 인식됨.
- 실제로 최근 세계적으로 다양한 위기론이 대두.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브렉시트로 영국과 EU가 분리되었으며, 세계 곳곳에서 우익 포퓰리즘이 대두, 반이민 정서가 강화 사라진 국경, 금지된 차별, 낮아진 장벽들이 재등장하며 사회 내부의 갈등의 수준이 높아짐. 지정학적, 경제적 갈등, 기후 위기로 인해 국가간 긴장과 불안정성이 커지는 현상이 일어남. 과장된 불안이 확산 되어선 안되지만, 많은 국가와 사회들이 이러한 동시다발적 갈등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협소하고 배제적이며 폐쇄적인 흐름이 강화되는 것을 막고 더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에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글로벌 리스크 변화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20년 사이 글로벌 리스크 변화에는 일련의 패턴이 보임.²⁸⁾ 세계적 경제 위기가 있었던 2008년 전후로는 주로 경제문제와 지정학적 문제가 연동되어 위협 요인이 되었다. 일차적으로 지구적 수준의 경제위기가 지정학적 갈등으로 표출되는 양상을 보임. 그런데 2011년 이후로는 경제와 사회 문제가 연결됨 일차적 경제 위기 이후 금융 손실이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그 사회적 결과로서 임금, 불평등, 식수, 이주, 난민문제가 나타났기 때문. 2015년 이후엔 혁신적인 기술 발전으로 데이터, 사이버 문제와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나타남. 금융위기가 안정된 이후 국가간 혁신 경쟁이 기술발전의 최전선에서 국가간 갈등의 형태로 대두되기 시작. 2020년에는 압도적으로 환경문제가 위기 요인으로 부상. 각국이 경제 위기 대응의 종합으로 경기가 다시 상승

26) Lawrence Freedman, 2019, 267~269

27) Lawrence Freedman, 2019. The Future of War : A History, Public Affairs. (pp. 264~276.)

28) WEF 『Global Risk 2020』 http://www3.weforum.org/docs/WEF_Global_Risk_Report_2020.pdf

하고, 더 많은 지역에서 산업생산이 확대되면서 환경문제 악화.

- 이처럼 1970년 지구화가 시작된 이래 본격화된 금융화는 2008년 금융 위기를 가져왔고 그것이 지정학 갈등으로 표출되었으며, 위기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경제 침체에 빠진 국가와 사회에서는 임금하락과 불평등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지정학적 위기가 겹친 지역에서는 난민 문제가 발생. 경제위기가 안정되자 국가간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위한 경쟁이 재개되었고 그것이 갈등요소가 됨. 경기 침체가 극복하고 주요국 경기가 모두 상승하자 환경 문제가 심화됨.
- 이렇듯 금융위기, 지정학, 사회문제, 기술혁신과 안보 갈등, 국가간 경쟁과 환경 위기의 심화가 맞물려 나타나고 있는 지난 20여년의 변화는 오늘날 '뉴 노멀' 혹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불리곤 하지만, 단지 다양한 위기를 과장해 새로운 상황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지난 시기와의 연속성과 역사적 사례들, 상호 연관된 문제들의 연쇄를 보다 분명하게 분석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음. 글로벌 수준의 위험 요소와 지역수준의 문제들, 국가간 협력의 과제들은 단지 '불확실성'이라는 모호한 장막 뒤에 가려둘 것이 아니라 보다 분명하게 분석하고 인식할 필요가 어느때 보다 높아진 것.
- 유럽의 평화는 비슷한 국가들끼리 조율해 나가는 것, 북아메리카의 평화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관계, 아시아의 평화는 그야 말로 한눈에 담아지지 않는 수많은 차이를 마주하는 일에 달려 있는 것 종교 차이, 문화 차이, 역사 차이, 정치적 이념의 차이, 경제적 발전의 차이, 연결되어 있어 같은 공간과 시간을 살아가지만, 접촉면 마다 다른, 좀처럼 한곳에서 만나지 않는 미, 중, 일, 러, 남북이 만나는 곳, 그래서 엄청난 도전이지만, 역량을 넘치는 부담이 되곤 하지만, 차이를 이해하면, 기본을 해결해 나가면 적어도 격차를 더 벌려나가지는 않을 수 있음. 생존과 안전과 평화는 기본,
- 과거의 전쟁에 묶여 있지 말고, 미래의 평화를 대비해야. 코로나로 인한 위기와 멈춤의 시간이 준 이성의 시간. 과거의 전쟁은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미완의 평화는 더 완전한 평화로 변화시켜야 한다. 새로운 위기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 흡스적인 국가간 생존투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는 인간의 공동체적 본능이 깨어나야 한다. 코로나 위기는 어찌면 위기를 대면해 이성이 작동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멈춤과 선택의 시간일 수도 있다. 생존에서 사회성으로, 사회성에서 이성으로.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백무산 「정지의 힘」 문

- 미중갈등과 코로나 위기가 복합적으로 갈등의 수준을 높인다고 해서, 70년 전에 한반도가

갈등에 휘말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미중갈등의 인질로 잡혀 있을 순 없음. 한반도에선 더 이상 단 한 명의 생존도 지정학 갈등에 의한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4.27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에선 남북간 불신과 위협, 상호비난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만든다는 '9.19 군사합의'의 정신은 더 절실. 국가간 갈등을 무조건 전면적 생존투쟁으로 인식하는 것 그 자체가 냉전의 오류이고 인간 지혜의 부정. 인간의 이성은 이미 다양한 위기의 원인을 식별해 분석하고 다각도로 예방적 대안을 제시할 정도로 발전. 도피적 이성, 방어적 규범이 아니라, 현실을 관통하는 의지. 이상을 설정해야, 기존의 부정적 관점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고, 협력을 키워나갈수 있고, 현실을 만들어 갈수 있음.

- 2019년 하노이 이후, 서로의 입장에 더 접근하는 새로운 프로포절의 필요성.
- 한국은 국가들간 협력을 추구해야하고 1) 중견국으로서 지위를 일본과 대등하게 올리고 2) 미국을 설득해 북한을 좀더 한미일로 끌어당기고, 3) 남북, 한일관계를 동시에 개선하고, 4) 남북일의 공동 이해관계를 더 키우고, 남북일미, 한중일, 남북미 등 3-4자 모임과 관계를 만들기를 제안. 또한 5) 북방으로, 남방으로 유사한 규모의 이해관계를 더 만들어 나가고 최대한 유사한 입장에서 공동대응. 중국과 미국에 좀더 유연하고 협력 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촉구 할 필요.
- 미국 중국 일본에 한국 상황과 향후 과정 설명, 당사자들이 더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 협의와 해결 과정 지지 부탁, 핵문제의 현실적 해결 방안. 주변국 설득 동의후 사전 조율 후 남북 정상회담 제안, 당장 교환 가능한 것 교환, 단계별 진행 제안. 한일 정상회담. 한반도 상황 협조 부탁, 해결할 것 해결. 불필요한 외교분쟁 낭비 말고, 과거 합의들 담화들 존중. 중미 정상회담 촉구 G20, 이는 남북문제 만이 아닌 코로나 이후 위기 대응 문제
- 한중일 정상회담: 과거와 미래의 갈등 연동 억제, 코로나 경제위기 공조 필요, 위기가 상호 증폭될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 리더십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공감, 지역 리더십 형성을 통해 세계에도 귀감을. 다자 합의들과 다자은행(혹은 기금). 비핵화와 지원 교환후 2, 3 단계 진행을 위한 다자회의 준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버든 셰어링과 commitment. 6자 실무회담: 몇달 일정으로 양자 3자 4자 회담. 6자 정상회의: 며칠 일정으로 양자 3자 4자 회담

References

<https://www.heritage.org/military-strength>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Global trends: Paradoxes of Progress (Washington DCL NIC, January 2017) <https://www.dni.gov/index.php/global-trends-home>

Robert Higgs, 2006. *Depression, War, and Cold War :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Oxford University Press.

Roberta Wohlstetter, 1962, *Pearl Harbor: Warning and Decis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Ron Robin, 2016, *The Cold War They Made: The Strategic Legacy of Roberta and Albert Wohlstett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Building the Cold War Consensus The Political Economy of US National Security Policy 1949-51

Lee E. Ohanian (1997) Macroeconomic effects of war finance

Lawrence Freedman, 2019, *The Future of War : A History, Public Affairs.*

Young, Charles Stuart (2014) Name, rank, and serial number _ exploiting Korean War POWs at home and abroad-Oxford University Press

Thomas Hennessey (2015) Britain's Korean War_ Cold War diplomacy, strategy and security 1950-53-Manchester University Press

Tessa Morris-Suzuki (2018) *The Korean War in Asia_ A Hidden History*-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Subcommittee on Korean War Atrocities - Korean War Atrocities Part 1-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3)

Paul M. Edwards (2010)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Korean War*, 2nd Edition (Historical Dictionaries of War, Revolution

Paul M Edwards (2018) *The Mistaken History of the Korean War_ What We Got Wrong Then and Now*-McFarland & Company

Millet (2001) *The Korean War A 50 year critical historiography*

Matray (2016) *Korea s war at 60 A survey of the literature*

Keith D. McFarland (2009) *The Korean War_ An Annotated Bibliography*-Routledge

James I. Matray, Donald W., Jr. Boose (2014) *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the Korean War*-Ashgate Pub Co

Hess, Gary R.(2009) *Presidential Decisions for War_ Korea, Vietnam, the Persian Gulf, and Iraq* Cold War historiography at the crossroads

Bud Hannings (2007) *The Korean War_ An Exhaustive Chronology* (3 Vol. Set)

Boose (2001) *the korean war truce talks*

Anthony Tucker-Jones (2013) *Images of War - Armoured Warfare in the Korean War* Rare Photographs from Wartime Archives

- Korean War Almanac-Facts on File (2006)

베른트 슈퇴버, <한국전쟁>

<한국전쟁 체험담 연구> <한국전쟁 이야기 집성>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김보영, <전쟁과 휴전> 남기정, <기지국가의 탄생> 김명섭 <전쟁과 평화: 정전체제 탄생>

박태균, <한국전쟁> 박찬승, <마을로 간 한국전쟁>

션즈화(沈志華), 최만원 옮김,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선인, 2010

션즈화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최후의 천조>

세션 1

한국전쟁의 유산

토론

김범수 교수님의 “한국전쟁과 민족주의 분화” 발제에 대한 토론문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한국사회에 형성된 단일민족 민족주의가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반공민족주의, 대한민국 민족주의로 분화·발전하는 과정을 신문기사 검증을 통해 분석한 흥미로운 논문입니다. 단군의 자손이라는 단일민족 민족주의가 대한민국 민족주의로 변화·발전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주어서 오늘날 한국이 경험하고 있는 대한민국 민족주의의 출발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 논문이라 생각합니다. 남북분단과 전쟁을 겪으면서 단일민족 민족주의라는 관념이 점차 공산주의 정권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배제하는 반공민족주의와 대한민국 자체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민족주의로 분화하여 3개의 민족주의가 공존하는 1950년대의 현실을 매우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새롭고 의미 있는 발견이라 생각합니다.

이 논문의 이러한 가치를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토론을 위해 몇 가지 논의를 확장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한국민족주의 연구는 처음부터 ‘북한’을 배제한 채, 한국 독자적인 연구로만 진행해 오다보니 한국민족주의 연구범위가 의도치 않게 협소해 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연구도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시각을 기초로 한 기존의 흐름과 일맥상통합니다. 북한을 배제한 채 한국적 관점과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하는 관행은 특히 해외연구자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한 경향은 세계 ‘한국학’이라는 언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북한중심의 ‘조선학’과 이를 통합적으로 보려는 ‘고려학’의 시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중심의 연구를 진행한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민족’까지를 염두에 둔다면 ‘대한’ 혹은 ‘한민족’ 민족주의를 단일민족 민족주의로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고종이 ‘대한제국’을 일으킨 이후 일제 강점기까지는 ‘대한’과 ‘한민족’이 정치권과 엘리트층에서는 지배적인 담론이었으므로 단군의 자손으로서의 ‘대한’과 ‘한민족’을 중심으로 단일민족주의를 논의하는 것은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임시정부’가 좌우로 분열된 이후, 조선공화국의 일파들이 분리되어 나갔고, 나아가 일반대중의 지지와 의식까지를 고려하면 ‘대한’이나 ‘한민족’보다는 ‘조선민족’이 대중적인 담론을 지배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승만 정부가 주장하는 ‘한민족’ 단일민족주의는 정치적, 국가적 수준에서 주장된 내용들이며 기층민중과는 괴리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욱이 당시 조선(북한)이 이미 ‘조선민족’을 의식화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3천만 단일민족주의는 그야말로 ‘한국’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상상의 공동체’일뿐 실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둘째는 반공민족주의에 관한 부분은 매우 흥미롭다고 느낍니다. 반공민족주의 발현

이 단일민족 민족주의에서 대한민국 민족주의로 분화·발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현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도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입니다. 이승만 정부의 공산주의 정권의 배제는 매우 철저하며 극단적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조선(북한)정권도 마찬가지로 남북 체제대결 상황에서 ‘남조선’ 배제, ‘대한민국’ 배제 정책으로 일관하였지요. 초기의 대한민국 민족주의가 반공민족주의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승만 정부가 추구한 대한민국 민족주의는 반공민족주의와 중첩된다고 봅니다. 반공민족주의를 장착한 대한민국 민족주의가 탈냉전 시기 남북교류와 접촉의 증대에 따라 반공민족주의 색채를 상당부분 덜어낸 형태의 한국민족 민족주의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 구체적 계기는 한국과 조선의 독립의식으로 유엔가입이 결정적이라 할 수 있고, 남북간에 기본합의서, 정신회담, 그리고 내부적으로 교류협력법 제정 등으로 한국과 조선의 국가성이 눈에 띄게 강화되었고 그에 따른 국민의식의 증진으로 가능했다고 봅니다. 반공민족주의 약화와 대한민국 민족주의 강화로 이어지는 과정에 관한 연구가 더 면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는 대한민국 민족주의의 발현시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김교수님 분석해 주신 것은 대한민국 민족주의가 한국전쟁 이후 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부 혹은 국가 차원에서 그렇다는데 동의합니다. 만약 민족주의를 근대 국민국가 발전과정에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국가의 다수 구성원이 대한민국 국민의식을 지닌 민족주의는 탈냉전 이후, 혹은 2002년 한일월드컵 즈음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사회의 의식을 고려할 때, 김교수님께서 동아시아연구원 자료를 인용한 2005년과 2010년 자료를 인용한 데서도 잘 나타났지만, 그러한 현상이 2000년대 이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냉전시기에는 대개 우리나라를 지칭할 때 ‘남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다분히 냉소적으로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한과 북한이라는 언어는 ‘대한’ 혹은 ‘한국’이라는 민족 혹은 국가의 불완전한 현실을 드러내는 호명이지요. 남한과 북한, 혹은 한국과 조선 둘의 통일과 통합을 근대 국민국가의 완성이라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따라서 통일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이지요. 이러한 경향은 냉전시기와 1990년대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이 아니었다 싶습니다. 그것은 물론 한국전쟁 이후 정부(국가) 차원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민족주의’가 국민의식으로 확산·발전하는 긴 과정으로 이해해야 되겠지요. 이 부분은 김교수님이 ppt에서 잘 설명해주었다고 봅니다. 논의를 확장하는 의미에서 논지를 전개해 보았습니다.

‘유엔사 규정’(UNC Reg.)과 유엔군사령부의 DMZ 관리

최철영(대구대학교 법학부)

1. 한국정전협정과 UN군사령부

- 2020년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
- 한국전쟁 초기 궤멸의 위기에 처해 있던 한국군은 미국주도의 다국적군으로서 소위 ‘UN군’을 배경으로 방어에 나설 수 있었고, 이후 세계 최강의 전력을 보유한 미군 중심의 UN군에 쫓기던 북한은 중국군의 개입을 통해 기사회생하여 전쟁 이전의 상태회복을 최대한의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한 한국정전협정의 체결에 동의.
- 한국정전협정의 체결 이후 한반도는 대내적으로 한국전쟁 이전의 정치경제적 분단에서 군사적, 사회문화적, 민족적 분단으로 그 범위를 전면화, 첨예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질서가 이념에 기초한 냉전적 분단으로 구조화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
- 한국전쟁을 어떠한 민족적 희생을 치르더라도 한반도의 분단 고착화를 저지하겠다는 의도에서 정치적으로 행사된 무력이라고 이해한다면, 한국정전협정은 실패한 정치적 무력에 대한 법적 책임의 추궁없이, 발생한 현실을 수긍하고 더 이상의 인적 및 물적 희생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분단의 고착화를 용인하는 국제법적 규범.
- 한국정전협정은 동 협정에 따른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를 군사정전위원회가 감독하도록 규정.(제2조 제25항 ㄱ호)
- 이에 따라 UN군사령관이 임명하는 5명의 고급장교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임명하는 5명으로 구성되는 군사정전위원회가 DMZ의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하지만, 북한은 이미 1994년에 한국정전협정에 따른 군사정전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를 설치하였으며, 2013년에는 한국정전협정의 백지화 선언.

2. UN사의 DMZ 관할권과 법적 근거 검토

- UN사와 북한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2000.11.7. UN사.비서장급 후속회담을 통해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를 체결하여 철도와 도로가 통과하는 비무장지대 구역의 남측부분을 UN사가 아닌 한국정부가 관리하는데 합의.
- 하지만 UN사는 2002년에 남북지뢰검증단의 교환과 관련하여 남북검증단이 군사분계선 넘어 상대방 지역에서 진행한 지뢰제거 작업에 대해 검증하는 사안에 대하여 군사정전위

원회 즉, UN사에 통보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또한 2002.11.28. 판문점 장성급회담의 UN사측 대표인 제임스 솔리건 소장은 “북측이 UN사의 승인을 배제하려고 하면 금강산 육로관광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제대로 추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전협정에 따르면 군인 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DMZ에 들어가거나 군사분계선을 넘으려면 사전에 UN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남북한 인사들의 인원 및 차량에 대한 승인권을 요구.
- 2008.9.25.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인 로버트 에이브럼스는 미국의회 상원의 인증 청문회에서 “DMZ 내의 모든 활동은 UN사의 관할이기 때문에 남북이 대화를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항은 UN사에 의하여 중개.결정되고, 준수.집행되어야 한다”고 하여 UN사의 DMZ 관할권 주장.
- 하지만 분단 이후 남북한이 적용해온 MDL 출입관례는 남북한의 합의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UN사는 ‘소리없이’ 승인하는 사실상의 통보제로 운영되어 왔음.
- UN사의 DMZ 관할권 법적 근거로서 한국정전협정과 UN사 규정(Reg.)의 충돌 및 남북 및 UN사와 북한의 합의와 UN사 규정(Reg.)의 충돌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위법규범으로서 UN사 규정(Reg.)이 상위법규범으로서 한국정전협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 문제 그리고 국제적 합의와 국제기구(?)로서 UN사의 내부규정의 효력순위문제라고 볼 수 있음.
- UN사는 물론이고 국제기구가 재류국(host state)과의 협의 또는 동의 없이 재류국의 주권을 제한하는 규범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UN헌장의 위반이며, 국제법의 일반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위임.

UN헌장 제2조 7항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3. DMZ가 평화지역이 되기 위한 한국정전협정 적용배제 선언필요성

- 한국정전협정에 의한 DMZ는 군사안보 측면에서의 의미만 강조되어 파괴적 무력의 잠재적 충돌 가능성으로 포태하고 있는 사실상 평화 속의 전쟁지역으로 존재해 왔으나, 2019년 6월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과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등 DMZ접경지역이 유네스코(UNESCO)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한국정부는 더 나아가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DMZ에 대하여 인문학적 그리고 자연생태학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DMZ 국제평화지대화는 한반도의 첨예한 분단이 해소되고, 국제적 냉전의 최후 보루가 붕괴된 현상으로서 DMZ가 국제적 평화협력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임.
- DMZ의 실질적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UN사의 간섭없이 DMZ와 접경지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정전협정의 형식

적 체결 당사자 지위에 근거한 UN사의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정부의 한국정전협정 효력적용 배제선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후 현재의 한국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종전선언이나 한반도평화협정 등 새로운 한반도평화규범의 체제가 형성되기 이전이라도 UN과 국제사회의 양해 하에 DMZ를 새로운 성격의 지표공간으로 개념을 재정의하고 동 지역이 남북간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로서의 본래적 성격과 함께 남북상생과 협력을 위한 평화적 공간으로서 관리와 활용을 위한 남북 양자간 합의기구로서 ‘(가칭)한반도평화구역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할 것임.

김학재, 「전쟁과 평화의 사회적 기원 : 한국전쟁이 다섯 가지 쟁점」을 읽고서

홍석률(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이 글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가 어떻게 냉전, 분단, 정전 상태에서 벗어나 좀 더 항구적으로 평화가 정착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한국전쟁의 중요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전쟁을 한반도 차원에 국한시켜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세계질서와 동북아 지역질서 속에서 살펴보고,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후 현재까지의 장기적인 추세를 염두에 두고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전쟁은 아직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는 전쟁이고,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전 상태 하에 머물러 있다. 동아시아는 여전히 한국전쟁 중에 형성된 샌프란시스코 체제(분절된 평화, 양자동맹, 미일동맹 주축, 동맹의 위계성)하에 놓여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길을 다차원적으로, 또한 장기적인 역사적 흐름과 맥락을 염두에 두면서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다만 이러한 지향성과 방법론을 풍부한 사실 분석과 접목시켜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1. 한국전쟁의 원인, 분단과 전쟁의 관계는?

이 글에서 지적된 바대로 전통주의자들은 한국전쟁을 이것이 발생한 1950년 6월 25일에 초점을 맞추어 그 원인을 규명하려 한다. 반면 수정주의자들은 전쟁 발발 자체를 어떤 과정의 결과로 보고, 이러한 전쟁을 일으킨 갈등의 기원을 찾으려 한다. 이러한 양상은 전통주의와 수정주의라는 시각과 입장 차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서구의 사람들은 한국전쟁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전쟁의 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한국전쟁사 서술도 대체로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해방과 분할점령부터 한국전쟁사를 서술하는 경향이 있으며, 민족분단을 전쟁의 원인으로 연결시켜 보는 경향이 있다. 반면 서구인들은 분단과 전쟁은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분단은 전쟁으로 이어졌다. 반면 독일의 분단은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베트남은 전쟁으로 분단을 해소하였지만, 한국에서는 전쟁으로도 분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 때 한국, 베트남, 독일의 분단 상황의 유사성과 차이성이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이 문제는 평화정착과 분단극복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2. 총력전과 제한전

한국전쟁은 총력전이자 제한전이었다. 한국전쟁은 냉전시기 제한전 관행과 규칙을 형성해가는 전쟁이었다. 미국, 소련, 중국은 제한전 규칙을 정립하기 위해 한국전쟁 중 사실상 서로 암묵적으로 공조하는 양상을 보였다. 제한전을 위한 강대국의 공조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분단, 정전 상태가 통일로도 가지 않고, 반대로 전쟁으로도 가지 않으며 장기화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런데 최근 북한 핵개발은 약소국이 강대국을 직접 전면 공격할 가능성을 발생시켜 제한전 규칙을 파괴하는 측면. 소련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이 아닌 북한이 패권국 미국과 핵 균형을 이루겠다고 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3. 냉전의 다양성과 중국의 한국군 참전

권헌익이 주장했던 바대로 냉전의 양상은 서구의 오랜 평화(Long Peace)와 비서구의 끊임없는 열전, 내전, 분쟁 사태. 문자 그대로의 냉전(The Cold War)은 서구에서 강대국 사이에서만 가능했던 것.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강대국끼리의 전쟁은 그 피해가 너무 심각하여 피해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형성되었다.

중국은 20세기 전반기에 반(半)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의 세계적 지위는 각 시기별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전쟁 때 중국은 사실상 소련을 대리하거나, 소련이 중국에 부담을 떠 넘겨 참전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중 미국과 맞서 싸워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중국이 마침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인정받는 측면이 존재한다. 중국학자 뉴진(牛進)은 1950년대 중반 중국은 한반도의 휴전선, 베트남의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완충지대를 형성하고 대치하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과 미국이 막 열전을 종식시키고 명실상부한 냉전으로 접어들었다”고 했다. 중국은 한국전쟁을 계기로(발판)으로 냉전의 주체인 강대국 반열에 들어간 측면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전쟁을 처음부터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보는 것은 다분히 결과소급적인 접근이 아닌지?

남북한도 마찬가지로인데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강대국(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은 지역적 차원의 강대국일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의 강대국이다. 이들과 남북한 사이에는 확실히 역량의 격차가 있다. 그러나 전후 70년 동안 남북한의 국제적 지위도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남한의 경우 단지 약소국이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전후 70년 동안 남북한의 국제적 지위 변화에 대한 언급과 고려가 부족해 보인다. 주변 강대국과 남북한이라는 사고의 틀 자체, 약소국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도 확실히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세션

2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 : 전망과 과제

사 회 : 김성철(서울대)

발 표

핵 평화체제 : 전재성(서울대)

경 제 : 김병연(서울대)

사회·문화 : 정근식(서울대)

남 북 관 계 : 천해성(서울대)

보 건 의 료 : 박상민(서울대)

**세션
2**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 : 전망과 과제

비핵화, 평화체제

전재성(서울대)

비핵화, 평화체제

전재성(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1. 남북 긴장 고조와 북한의 비핵화

- 북한의 대남 공세의 다양한 의도 분석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확신이 어려운 상황
 - 제재로 인한 경제난 가속화 및 북한의 국내 반발 무마를 위한 관심 전환의 필요성.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난 정면돌파전을 강요하는데 따른 정당화 논리가 필요. 대남 공세와 북한 내 광범위한 대중 동원, 소위 “평화번영”의 간판을 내건 동족대결정책이라는 비판이 비등. 한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 동포, 근로대중에 대한 압살정책이라는 점이 비판의 새로운 포인트.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남북 교류협력의 필요성 속에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 및 반발. 돼지열병, 코로나사태, 식량부족 등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충분한 대북 지원을 받지 못한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 다수당을 점한 한국 여당의 대북 정책의 미온성에 대한 비판
 - 북핵 협상 진전 미비, 대북 경제제재 해제 현실화 난망의 환경 속에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외교를 비판하는 강경세력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대남 공세로 볼 수 있는 측면
 - 후계자 구도의 정립 필요성이 있다면 대남 공세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주도함으로써 후계구도 수순을 밟는 부수적 효과
 - 한국의 대미 외교에 대한 비판. 한미공동훈련, “반공화국 군사대결 정책” 등 한미동맹 틀을 비판하면서 최신 무기 도입 및 개발 비판. 미국을 설득하여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협상의 조건을 만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입장표명
 - 남북 긴장 조성, 더 나아가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무기 과시 등은 미국 대선 기간, 미국 신행정부 등장 이후 북핵/북한 문제의 우선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이자 현재가 적기라는 판단.
- 지금까지 북핵 문제는 북미 협상, 이후 북한의 협상 폐기, 핵무력 증강, 협상 재개의 순을 밟아왔음.

- 그러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15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북한의 명백한 협상 파기 의사는 없었음. 현재까지 북한이 북미 협상 파기의 의사를 보이지는 않고 있음.
- 판문점 선언 및 싱가포르 회담을 주도한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한국과 미국에 대한 공세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향후 북미 핵 협상을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음.
- 북한의 도발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노력을 무위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도록 북한이 노력할 가능성.

○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북핵 협상 및 평화체제 전망은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

-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최고 수준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 치적을 쌓겠다는 입장.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이해 및 해결 의지, 이를 통한 동북아 평화 및 안정에 대한 구도 등은 찾기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북미 협상은 북한에게 기회요인으로 작용.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축으로 비핵화, 평화체제 이후 북한의 발전을 도모할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계산은 존속할 수 있음.
- 반면 바이든 행정부 등장 시 북한에 대한 완전한 핵폐기 요구, 전략적 인내 정책의 지속,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 등의 노선을 추구할 가능성이 큼.

○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선 이전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최대한 부각시켜 내년 북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

- 북한의 군사적 시위는 국제 추가 제재를 초래하지 않고, 미국의 핵협상 포기 및 한미동맹 강화, 중국의 북한 비판의 수준을 넘지 않은 선에서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보이는 데에 치중할 수 있음.
-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 북핵 문제 해결의 우선 순위를 높이고, 바이든 후보의 당선 시 북핵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전략적 인내 정책의 추진 불가 상황을 조성.
- 민주당 정권도 북한의 미본토 핵능력 증강 시 동결 우선 협상 및 북핵 문제

를 우선시하는 북미 추가 협상, 대북 제재 해제 등을 고려할 필요성을 느낄 것임.

2. 한국의 기본 원칙과 미래 비핵화 협상 대비

○ 대북 군사 억지, 대북 경제 제재, 비핵화 협상 및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총체적으로 기울여야 함.

- 북한의 군사력 사용 위협에 대한 철저하고 단호한 군사 억지의 중요성
-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 준수 의사 확인
- 한국의 북한 비핵화 협상 주도권 확보는 여전히 중요
-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정착, 평화체제 이후 북한의 정상국가화 및 발전, 남북 평화공존 및 통일의 전략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원칙의 요소들임.

○ 이 가운데 내년도 새롭게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비핵화 협상을 목표로 수단 축적이 중요

- 트럼프 정부의 대북 협상 의도의 문제점: 대북 협상의 즉흥성, 단기적 전망,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협상 이익 반영 등
- 한미 간 북핵, 북한 문제를 둘러싼 긴밀한 전략 대화의 필요성
-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핵 협상이 정체되는 가운데 한미 간 대북 접근을 둘러싼 이견과 오해가 증폭되는 경향
- 한미일 간 전략적 협력 구도도 매우 약화. 한일 간 북핵 관련 정보 교환 및 전략 대화 부재

○ 핵 협상에 대비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실행안의 보완 필요성

- 포괄적 합의는 비핵화 및 북미 관계 개선, 평화체제에 대한 개념 일치 필요.
-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 내용은 여전히 불확실. 협상과정과 북미 간 신뢰구축, 포괄적 합의 내용 간의 관계 설정이 중요. 북미 간 타결 수준은 협상 과정의 신뢰구축에 의해 상당 부분 결정되는 논리
- 핵 동결에 이어 기존 핵무기의 완전 폐기에 대한 대가로 경제제재의 완전 해제를 넘어 군사적 조치, 평화체제, 평화체제 이후 김정은 정권의 존속 등

에 대한 논의도 필요. 또한 북한이 신뢰가능한 청중비용이 높은 대북 지원 정책, 국제적 패키지 마련에 한국이 더욱 노력할 필요.

- 포괄적 합의에 기초한 응축된 단계적 실행이 중요. 예를 들어
 - 1 단계: 북한의 완전 신고 및 철저 검증, 영변 시설 완전 해체 vs. 한미의 유의미한 경제제재 해제
 - 2 단계: 북한의 완전 핵 폐기 vs. 핵 폐기 완료 이후 경제제재 완전 해제 및 북미 관계정상화

3.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요성

○ 북핵 문제, 평화체제, 남북 관계는 남북 간 양자관계가 중요한 변수이지만 여타 변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음.

- 1993년 이래 북핵 문제는 다양한 맥락 속에서 재정의되고 문제의 해결 방향도 변화해왔음.
- 미국의 단극체제가 끝나고 미중 간 전략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북핵 문제 역시 새로운 국면에 진입
- 비핵화 이후 한반도에 대한 미중의 전략적 이익 계산이 첨예한 요소로 등장할 가능성.

○ 현재 한국의 미중관계전략은 비핵화 이후 한반도에 대한 전망과 밀접한 연관

- 북한은 비핵화 협상 및 이후 북한의 발전 때문에 미중 전략 경쟁 속에 북한이 처하게 될 전략적 딜레마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
- 비핵화 이후 북한이 대미 치중 상황이 되면 중국은 비핵화되지 않는 현상유지를 선호할 것. 반면 미국은 비핵화 이후 남북이 교류, 협력하면서 미중 관계에서 독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 하면 역시 비핵화되지 않은 현상유지를 선호할 것.

○ 한국이 미중의 전략 경쟁 속에 미중 간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외교전략, 대미, 대중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비핵화 문제와 직결되는 상황으로 발전해옴.

- 한국은 비핵화된 이후 남북 협력이 미중 모두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미중 협력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주도 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함.
- 한국의 전략적 운신 공간은 미중 전략 협력의 양상에 의해 규정되는 바가 크므로 비핵화 문제와 별도로 미중 관계전략을 외교적으로 가다듬을 필요.
- 이러한 문제의식은 북한과도 공유되어야 함. 평화체제 이후 평화 한반도에 서 남북 모두 미중 전략 경쟁의 딜레마에 처할 상황임을 인식하고 남북 간 미중 관계의 협력적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전략 공유가 중요.//

**세션
2**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 : 전망과 과제

남북 경협방안의 모색

김병연(서울대)

남북 경협방안의 모색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남북 경협의 위치

- 경협은 북한의 발전과 남북 통합의 입구
- 즉 경협은 경협 자체로의 의미(예: 한국 기업의 사업 기회)뿐 아니라 보다 미래지향적이며 목적 지향적 관점에서 재설계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경협은 정치적, 현재적, 미시적 관점에서만 논의되어온 경향이 많았음

남북 경험의 목적

- 북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
- 남북 통합에 기여
- 남북 경제의 시너지 창출
-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에 기여

북한의 지속 가능 성장

- 체제이행은 지속 가능 성장의 절대 요건
 - 최소 체제이행 정책: 협동농장의 가족농화, 시장 거래의 자유화, 창업과 기업활동의 자유(사적 소유권)
- 북한 주민의 인적 자본 개발
- 환경 친화적 성장
 - 북한은 탄소배출량이 세계 최저 수준
 - 저개발의 이점을 활용하여 청정 국가로 발전
- 미래 경쟁도 고려해야 함 (예: 중국 요인 고려)

남북 통합

- 통합은 일반적으로 성장에 기여
 - 김병연(2015)은 북한 경제성장률 최대 13%, 남한 경제성장률은 추가적으로 0.7-0.8%p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상품과 서비스 시장, 요소 시장, 자본의 통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노동 이동을 제외한 현 EU단계까지의 통합이 중기적 목표가 될 수 있음
 - 경제 통합은 비핵화와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음

남북 경제의 시너지 창출

- 남한 경제의 위축 요인 해소에 기여(단기, 중기)
 - 한계 기업의 저임금 노동력 부족
 - 기술 기업의 실험 축적 공간과 기회의 부족
- 미래 산업의 실험(장기)
 -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바이오 산업, 원격 의료 등
 - 사람과 도시, 산업에 미래 기술 적용하여 실험할 기회
-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와 이점 활용
 - 물류, 국제화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 경험과 비핵화를 분리하기 어려움
 - 영구적인 비핵화에 기여하는 경험
- 북한의 체제이행은 성장, 통합에 절대적인 요건임
 - 북한의 필요: 체제이행, 추격형 성장, 남북 통합
- 북한의 국제화도 비핵화, 성장과 통합에 기여
-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적 제약도 고려되어야 함
 - 독재자의 인센티브: 권력 유지와 경제 발전의 조화

기존 남북경협 방안 평가

- 사업 중심, 인프라 중심
- 목적 부합적이라기보다 북한의 필요를 상정하고 현시점에서 가능한 사업을 설계
 - 소수의 전문가가 개입
 - 틀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현 정부의 한반도신경제구상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보임

새로운 경험방안의 설계

- 하나의 경험으로 모든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려움
- 경험을 규모와 주체별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필요
- 대규모 경험: 수조원 이상의 투자 비용 발생(정부 주도, 대기업· 다국가 개입, 장기 사업)
- 중규모 경험: 수백억 - 수천억 정도의 투자 비용 발생(정부 주도, 대기업· 일국 개입, 단중기 사업)
- 소규모 경험: 수백억 이내 투자 비용 발생(민간 주도, 중소기업· 일국 개입, 단중기 사업)

규모에 따른 경험의 목적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북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남북 통합	남북 경제 시너지
	비핵화	체제이행	국제화			
대규모	+++		+++	+++ (자본, 인프라)	++	++
중규모		+++	++	++ (제도, 자본, 인적 자본)	+++	++
소규모	++	+++		++ (인적 자본)	+	+

+++ : 매우 큰 긍정적 영향, ++ : 중간 정도의 긍정적 영향, + : 작은 긍정적 영향

남북 경험의 접근법

- 대형 경험
 - 국제화, 비핵화, 북한 개발 목적
- 중형 경험
 - 정부 주도 투자와 북한 제도의 변화, 이를 통한 남북통합
- 소형 경험
 - 북한 주민과의 직접 접촉
 - 소규모 사기업, 시장화 촉진

11

중형 경험과 특구

- 북한의 정치적 제약을 고려할 때,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자유로운 FDI를 허락하기는 어려울 것임
- 특구 모델이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남북경협 모델일 가능성 높음
 - 특정 지역에 특구를 설치하고 성격에 맞는 기업 유치
- 특구의 설계시 고려할 사항
 - 북한 성장과 남북 통합과 시너지
 - 제도 변화 추구

12

남북 시너지 창출을 위한 다양한 특구

-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경공업 수출 특구
- ICT 산업 기반의 혁신 특구도 필요
 - 한국 기업이 기술 축적을 실험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관광 의료 특구
 - 남한의 의료 기술과 북한의 젊은 노동력, 그리고 청정 환경의 결합
- 국제 청년 일자리 특구
 -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업하고 실험할 수 있는 국제 특구
 - 한국의 기능·기술 인력과 북한의 기술 대학 양성 인력 결합 제공
- 물류 특구

소형 경험과 시장화

- 기존 대북정책의 허점은 북한 지도자를 변화시키려 했음. 그러나 독재자의 목적 함수가 변하는 예는 찾기 힘들
- 스마트 대북정책은 목적함수가 아니라 제약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임
- 북한의 시장화는 독재자가 직면하는 제약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되고 있음
- 스마트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한 관료와 주민을 “Homo Juche-man”에서 “Homo economicus”로 바꾸는 것임

한국 사회의 북한 변화 기여

- 한국이 북한에 투자와 무역뿐 아니라 경제사회 인프라 제공
- 기관과 기관, 지방과 지방의 연결, 학교와 학교, 기업 협회와 협회의 연결
- 북한 수출과 혁신을 위한 한국의 인프라 제공
 - 교육 인프라 - 학교, 커리큘럼, OJT, 교환
 - 수출 관련 인프라 - 지식, 공항·항만, 네트워크
 - 기업 인프라 - 혁신을 위한 test field 와 혁신 아이템 제공
 - 데이터 인프라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업 육성

남북 통합

- 남북 통합은 점진적으로, 북한의 제도 변화, 비핵화와 연동되어야 함
- 통합 단계
 - 북한 상품에 대한 남한 시장 개방
 - 남북한 시장 상호 개방
 - 요소시장 개방(노동력) 제외
 - 제도 통합(위임 제도의 설립과 영역 확대)과 노동력 이동 자유화

경협, end outcome?

- 북한은 수출주도형 경공업, 혁신 제조업, 청정 환경 산업이 중심이 되는 경제 개발 전략이 필요
- 동시에 국제 경제 질서에 편입
- 경제 발전과 통합이 영구적 비핵화에 기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
- 남북통합을 넘어 동북아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도

세션 2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 : 전망과 과제

한국전쟁의 유산을 넘어 지속가능한 평화는 어떻게
가능한가(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정근식(서울대)

한국전쟁의 유산을 넘어 지속가능한 평화는 어떻게 가능한가(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정근식(서울대학교 사회학과)

1. 6.25전쟁 70주년의 자화상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자 6.15선언 20주년이다. 물론 4월혁명 60주년이기도 하고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기도 하다. 미처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올해의 기억과 기념의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이런 여러 기념할만한 의제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가는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사회문화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초에 국무총리와 민간출신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가 출범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정부 부처 장관들과 민간인출신 인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¹⁾ 실질적인 업무는 (국방부가 아니라) 보훈처가 담당했다. 이 위원회가 계획한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전쟁에서 우리를 지원한 해외 22개국 용사들을 초청하여 전쟁을 기억하고 이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이들이 모두 90대에 가까운 노병들이어서 올해가 초청 가능한 마지막 해라는 생각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이런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였다. 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는 노병들의 초청이 어려워지자 이들에게 마스크 100만장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처음에는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7개국 참전용사들에게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곧 22개국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의 마스크 공급부족 사태 재발을 우려한 사람들의 반대로 약간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런 사업 변경의 밑바탕에는 "해외 참전용사의 희생 덕분에 현재의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있"고,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신 덕분"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전체 참전용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 50만장, 21개국에 50만장을 보냈다.

돌아보면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협상의 국면은 2017년의 위기해소와 동시에 평화의 고양기였고, 이 과정에서 초점으로 떠오른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제재해제나 평화협정체결이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의 (예상치 못한) 결렬은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멈추게 했다. 마지막 가느다란 희망이 6월 30일 북미정상의 판문점 회동이었는데, 이 역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상황이 묘해지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은 문제 해결도 포기도 아닌 관리모드로 일관했으며 북한은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 전개에 한동안 당황했음이 분명하다. 이후 남북관계는 교착되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였다. 유감스럽게도 그 날 판문점에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적절한 자리를 만들지 못했고, 상황이 상당히 어렵게 돌아간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흥미로운 것은 판문점의 잠깐 동안의 회동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군사훈련 중지를 요청했다고 한다.

1) 민간인 출신의 위원 중에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그리고 여군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포함되었고, 전 공군참모총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2020년 접어들어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나름대로의 실천'을 언명했지만, 북한에 대한 복합적 제재망에 부담을 느껴 머뭇거렸고, 미처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교착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다. 북한 개별관광 허용이나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등이 거론되었지만, 북한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이 사임했다.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이 가져온 후폭풍이 1년 3개월만에 한반도의 잠정적 평화국면을 다시 위기국면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의 상황은, 만약 '그 때' 북미회담이 결렬되지 않고 타결의 방향으로 갔다면 올해의 6.15 20주년이나 6.25 70주년 기념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어색한 것으로 만들었다. 북한은 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저질렀을까, 또는 좀더 근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키를 북미회담이 쥐고 있게 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가 더 급한 질문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상황적 문제와 구조적 문제들이 섞여 있어서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국면전환의 경험들을 살펴보면서 지혜를 찾을 필요가 있다.

2. 한국전쟁과 그 유산으로서의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

한국전쟁 70주년에 돌아보는 한국현대사는 '큰 전쟁과 작고 불안정한 평화'로 요약된다. 창법적 폭력으로서의 제2차 세계대전이 식민지상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선물을 주고 남북분단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요구했다면, 한국전쟁은 무력으로는 한국의 재통일이 어렵다는 교훈을 준 대신 분단체제의 공고화라는 혹독한 대가를 요구했다.

한국전쟁은 한반도 분단을 공고화하고 양안의 분단을 구조화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8월에 이루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 1954년 12월에 이루어진 미국-대만 상호방위조약, 1958년 1월의 전술핵무기 한국 배치, 1960년 미일 신안보조약, 그리고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등은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를 구성하는 남방 3각동맹의 핵심적 구성요소들이다. 이에 상응하는 북방 삼각동맹은 1958년 중국인민지원군의 북한 철수 후, 1961년 7월 6일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7월 11일 중조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 체결됨으로써 그 모습을 드러냈다. 남방 삼각동맹이 한일간 동맹을 결여한 채 작동되었듯이, 북방 삼각동맹도 중소분쟁을 내재한 채 작동하였다. 중소분쟁이 고조되면서 소련은 북한에 대해 1961년 11월부터 1964년 10월까지 군사원조를 중단하였다. 동아시아는 안보 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문화 영역에서 진영간 대립이 관철되었다.

동아시아적 지평에서의 평화는 미중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미중관계는 1950년부터 1970년까지의 적대적 대립, 그리고 1970년대의 화해모색, 1979년부터 2008년까지의 협력, 그리고 최근의 경쟁과 새로운 갈등으로 구분되는데, 남북관계와 국내 정치는 이로부터 구조적 제약을 받으면서 변화를 겪었다. 한반도 평화는 미중관계와 남북관계의 상호작용에 의해 규정되지만, 양자 사이에는 시차나 균열이 존재하므로 중요한 변수들이 상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휴전이후의 한반도는 국지적 분쟁과 갈등으로 인한 전쟁의 위기와 작고 불안정한 평화가 반복되는 과정을 반복하여 왔다. 물론 전쟁의 유산으로서의 강력한 반공주의 및 반복의식이 사회저변에 깔려 있고, 이의 대척점에 민족주의 및 통일의식, 그리고 약간의 평화우선주의가 공존하고 있지만, 67년이라는 짧은 시기에 적어도 다섯 차례의 위기와 그것을 해소하는 노력이 관

찰된다. 위기의 국면이 1968년, 1976년, 1993년, 2003년, 2017년이었던다면, 위기해소나 화해를 위한 노력들이 1971-72년, 1978-79년, 1991-1992년, 2000년, 2018-19년에 이루어졌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미국의 가장 큰 원조 수혜국이었다. 1955년을 전후하여 남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군사지원 액수는 해마다 10억 달러 안팎이었다. 그러나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은 원조를 감축하고 대신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안을 1958년 1월부터 실행하기 시작하였다.²⁾ 이와 같은 미국의 조치들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강렬했다. 1958년 6월 25일 평양의 김일성광장에는 30여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 미군의 즉시 철수를 외쳤다. 1960년에 개관한 신천박물관은 북한의 반미주의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이후 북한은 다양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했다. 196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전국토의 요새화' 작업을 시작했고, '적을 꺼안는' 전략으로 병력을 휴전선 부근에 전진 배치시켰다. 또한 1963년 소련을 향해, 1964년에는 중국을 향해 핵무기 개발협조를 요청했다. 소련은 1965년부터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개발을 돕는다는 취지로 영변 원자력 관련 시설 건설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는 중국과 대만, 남한과 북한의 분단을 주축으로 하는 복합적 연결망이다.³⁾ 이 체제는 분단된 베트남을 포괄하면서 작동하였다. 1964년에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자 김일성은 베트남을 방문하여 호찌민과의 정상회담을 하였고, 베트남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과 소련의 분쟁 속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강조한 북한은 베트남 전쟁을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의 전쟁으로 규정했다. 북한은 1964년부터 1969년까지 무기와 군복 등 물자지원과 함께 공병부대와 공군부대를 파병하였으며, 이들을 '지원군'으로 지칭하였다. 특히 1968년의 상황은 북한의 베트남에 대한 간접지원을 한반도로 확장시켰다. 북한은 1968년 1월 21일 북베트남의 구정 대공세에 발맞추어 청와대를 습격하는 게릴라를 파견하였고, 푸에블로호를 나포하였다. 한국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향토예비군을 설치하고 총동원체제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와다 하루키가 표현하였듯이⁴⁾ 1970년대에 북한이 '유격대 국가'로 등장하자 한국도 '대유격대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⁵⁾

1968년 북베트남군의 구정 대공세는 미국으로 하여금 베트남전쟁에 대한 전략을 수정하도록 강요했다. 1969년 대통령에 취임한 닉슨은 이른바 닉슨독트린을 발표하고, 이어 미중 데탕트를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유엔에서 중국을 대표해오던 대만이 축출되고 중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미국은 주한미군 1개 사단을 철수시켰으며, 남북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도록 주문하였다. 그 결과가 1972년 7월 4일 발표된 7·4 남북 공동 성명이다. 닉슨독트린은 베트남전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73년 1월 27일, 미국과 월맹(북베트남)간에 파리평화협정이 체결되어, 50만에 달했던 주월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했다. 그 결과는 1975년 4월 30일 월남(남베트남)이 패망과 공산화 통일로 이어졌다. 당시 월맹(북베트남)과 북한은 거의 동시에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1974년 3월 2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조미 평화협정을 제안했다. 그 이후, 북한은 변함없이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 왔다.

베트남의 통일을 전후한 1975-76년의 시기에 한반도 안보위기가 찾아왔다. 북한의 김일성주

2) 이재봉, 2008, 「남한의 핵무기 배치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하여」, 『평화학연구』 제9권 3호.

3) 정근식, 2014,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의 형성과 해체: 지구적 냉전하에서 동아시아를 새롭게 상상하기」, 임형택 역음, 『한국학의 학술사적 전망』 2, 소명출판.

4) 와다 하루키(서동만·남기정 역), 2002, 『북조선: 유격대 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 돌베개.

5) 이 개념은 허은이 와다 하루키교수의 '유격대국가'라는 개념의 상대어로 사용하였다. 허은, 2016, 「냉전분단시대 '對遊擊隊國家'의 등장」, 『한국사학보』, 65, pp.427-480.

석은 1975년 중국을 방문하여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였고, 박정희대통령은 긴급조치 9호로 대응했다. 1976년 판문점에서 발생한 도끼만행 사건은 전쟁의 위기를 불러왔지만 김일성의 사과로 무마되었다. 한미 양국은 안보상의 위기를 주한 미군과 한국군의 합동 군사훈련으로 대처하기 시작하였다. 1976년부터 시작된 팀스피리트 훈련은 안보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북한은 이로부터 많은 위협을 느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동아시아의 냉전분단체제가 균열되고 평화가 진전될 수 있는 기회가 1979년이었다고 생각된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미중수교는 한국에서의 미군철수와 남북미 3자회담, 그리고 정치자유화의 문제를 부각시켰다. 1979년 미중수교는 1950년부터 시작된 미중적대의 종료이자 1971년부터 시작된 미중 화해가 협력으로 전환되는 출발점이다. 이를 주도한 카터대통령은 주한 미군 철수, 한국의 민주화, 남북미 3자 대화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박정희 대통령은 오히려 안보위기를 느끼고, 미군철수와 정치자유화에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심지어 카터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까지를 검토하였는데, 남북한 모두 이에 소극적으로 반응하였다. 박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의 제안이 담고 있는 동아시아 질서변화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유신헌법 폐지는 물론이고 그가 권고한 긴급조치 9호도 폐지하지 않았다. 북한도 이 시기에는 미국의 제안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79년의 상황을 분석해보면, 강고한 냉전 분단의 질서가 쉽게 평화의 질서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동아시아의 평화는 미중협력과 개별국가의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간 상호 신뢰를 필요로 한다. 1979-80년 시기의 한국사회는 강고한 냉전적 사고와 관행에 의해 한반도 평화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는지 모른다. 1980년 광주 희생의 대가로 한국사회에서는 한미동맹과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한 발언권을 얻기 시작했다.

3. 비대칭적 탈냉전과 화해의 모색

1990년부터 1992년까지의 3년간은 세계사 뿐 아니라 동아시아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변화의 시기였다. 1980년대 후반의 동유럽에서의 민주화요구와 1990년의 독일 통일, 그에 이은 소련의 해체는 세계적 탈냉전의 물결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과 소련은 1991년 7월 31일 전략무기 감축협정을 맺었는데, 이에 따라 남한에 배치되어 있던 핵무기도 11월 5일 부시 대통령의 승인 하에 철수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으로 인한 자신감에 기초하여 1990년 소련과의 수교를 시작으로 과감한 북방정책을 추진하였다.

1991년 8월, 남북한은 유엔 동시가입을 할 수 있었고, 12월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할 수 있었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상호 존중,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협력을 원칙으로 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합의였다.⁶⁾ 11월에 이루어진 한국에서의 핵무기 철수는 남북 기본합의서가 나올 수 있었던 중요한 조건이었다. 화해의 진전을 위하여 한미 양국은 1992년 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 두 가지 조치는 한중수교의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한국은 1992년 8월 중국, 12월 베트남 등 '과거의 적'들과 관계를 정상화하였다. 1979년 카터가 추진하던 동아시아의 탈냉전이 13년 후에 실현된 것이다. 한중수교와 이에 따른 경제협력은 한국과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1992년은 한중관계의 변화 뿐 아니라 중국과 대만, 공산당과 국민당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해였다. 안정된 미중관계를 배경으로 하여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 '92공식'은 중국과 대만의 화해 협력을 지속시키는

6) 임동원, 2015, 『피스메이커』, 창비. p.228.

매개체였다. 이런 탈냉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했고,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상호협력의 관계도 해체됨으로써 고립되기 시작했다. 한반도에서 비대칭적 탈냉전이 이루어진 것이다.⁷⁾ 이것은 '장기 북핵위기의 시대'를 낳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기능하기 시작하였다.

비대칭적 탈냉전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은 1985년 핵개발을 본격화하면서 동시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였다. 1991년 말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지만, 핵 활동을 지속하였기 때문에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 사찰을 요구하였다. 핵사찰은 6차례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은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을 거부하였고, 미국이 1993년 1월,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한다고 발표하자⁸⁾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1993년 3월에 팀스피리트 훈련이 실시되자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위기가 고조되었다. 1994년 6월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과 협상을 했다. 이어 김일성 주석은 한달 후로 예정된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던 중에 사망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1994년 9월,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 2척과 함정 33척이 원산 인근 동해에 집결해 영변의 핵시설을 공습하려고 했다.⁹⁾ 1994년 10월 21일 북미간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1차 북핵위기가 종료되었다. 제네바 합의의 핵심인 신포의 경수로 원전건설은 1995년부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북한은 세계사회주의의 해체에서 오는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로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희생자의 규모를 알 수 없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재앙을 겪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정주영 현대회장의 소담 방문을 계기로 하여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이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남북 평화체제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남북 경제협력의 시범사업으로 개성공단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 미국은 1979년과는 달리 남북정상회담이나 개성공단 설립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였다. 왜 이 당시 미국이 반대하였는가는 필자가 아는 한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미국은 2001년 9.11 사태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이것이 남북화해의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를 대표로 한 미국 협상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였다.

2002년 12월, 북한이 핵 동결 해제를 발표하자 미국이 강하게 반발했다. 제네바합의에 의한 경수로 건설사업이 중단되었다. 2003년 4월 베이징에서 미·북·중 간의 3자회담이 개최되었는데, 북한은 '선 조미 평화협정, 후 비핵화'를 주장했으며, 미국은 '선 북한 비핵화, 후 조미 평화협정'을 주장했다. 중국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6자 회담을 관련국들에게 제안했으며, 8월부터 남북한과 미·일·중·러가 참가하는 6자회담이 시작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2005년 '北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계획 포기' 등 6개 항의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의 실행방식을 두고 북한이 반발하면서 2006년 10월 9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핵실험의 충격이 매우 컸지만, 2007년 2월의 회담에서 영변 원자로

7) 남북관계에서 '비대칭성'이라는 개념을 활용한 연구로 박명규, 2009, 「남북관계와 비대칭적 분단국체 제론」, 『통일과 평화』, Vol.1(1).

8) 한완상 전 통일부장관은 이 훈련의 재개가 한국내 미국 인사들도 잘 모를 정도로 워싱턴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9) 2009년 4월 13일,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4년 위기 당시 동해에 미국 항공모함 2척과 군함 33척이 와서 북핵시설을 공습하려고 했는데, 2시간의 전화통화로 클린턴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폐쇄 및 불능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13 합의를 이루었다. 10월에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10·3 합의)'가 채택되었다. 이 때 남북간에는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위원장간의 10.4 선언, 즉 8개항으로 구성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2000년 6.15정상회담부터 2007년 10.4선언까지 한국사회는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을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 한국전쟁이 남긴 부정적 유산을 치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2000년에 발효된 4.3 특별법과 이때부터 시작된 한국전후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운동은 2005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귀결되었고, 한국전쟁 55주년에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를 통해 전쟁 전후에 자행된 국가폭력 또는 미군의 폭격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사실로 인정되었고, '화해'는 평화로 가는 징검다리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006년과 2007년에 이루어진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대추리 주민들의 반대시위나 강정 해군기지 반대운동은 한국의 평화운동이 갖는 특성과 한계를 그대로 노정하였다. 그것은 남북관계 뿐 아니라 미군관계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2009년 1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후 북한은 2009년 4월 5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고, 이어 5월 25일 제2차 지하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후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실험과 유엔의 대북결의안이 주고 받는 형태로 사태가 악화되었다. 7월 24일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6자회담의 종료'를 선언했다. 오바마정부는 8년간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대한 비관여 정책을 수행하였고, 그러는 동안 북한의 핵 및 미사일능력이 크게 증가되었다. 2010년 3월의 천안함 침몰이나 11월의 연평도 포격전은 북미관계 뿐 아니라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전환점이었다.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에도 북한의 핵역량 과시는 계속되었다. 4월과 8월의 한미 군사훈련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전쟁위기를 고조시켰다.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 미사일 ICBM을 발사하고,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개시할 것인가, 협상을 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 2018년의 대전환이 시작되었다. 누구도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요소이면서 동시에 북미간 대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992년부터 2017년까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증진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은 첫째, 미군 및 전략무기의 철수나 감축, 한미 연합훈련의 중지나 규모축소, 둘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및 실험, 셋째, 각국의 군비경쟁, 넷째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루어진 중요한 국제적 합의들, 즉 제네바합의나 6자회담에 의한 9.19 합의는 평화의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핵심적인 원인은 신뢰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실험과 제재가 상승작용을 하면서 위기를 고조시켜왔다.

문제해결방식으로 미국과 북한이 서로를 향해 근본적인 선행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 추진하는 '쌍궤병행'을 주장하였다. 미국은 이런 점진적 접근보다 근본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안을 선호해왔다. 북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관계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북한 핵국면은 자연스럽게 문제해결의 당사자를 남북관계가 아닌 북미관계로 만들었다. 북한은 늘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전략을 채택했다고 할 수 있다. 2017년에 고조된 전쟁위기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통일보다 평화가 더 중요하고 급하

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평화주의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에 자리잡기 시작했고, 통일의 의미를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4. ‘불완전주권국가’와 민주정부의 딜레마

주지하다시피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의 촛불시위는 박근혜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밤 시민적 항의이며 평화롭게 전개된 사회운동이었으나 이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전쟁의 유산이 충분히 극복되지 않고 한국사회 내부에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태극기부대의 등장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05년부터 온라인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뉴 라이트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지만, 광장에서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다르다.

2017년 5월 한국에서 민주정부가 등장했지만, 전쟁 위기가 해소된 것은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뒤였다. 2018년 2월의 평창올림픽에서 시작된 남북화해와 평화의 국면은 2018년 2월까지 1년간 지속되었는데, 이 국면의 출발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 19일 평창동계올림픽을 평창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NBC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올림픽 기간에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나는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고, 미국 측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가능할 것인지는 오로지 북한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리처드 엔젤 수석 국제특파원은 미 NBC 투데이쇼 앵커와의 현장 연결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올림픽을 앞두고 긴장완화를 위해 힘쓰겠다면서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는 미국과의 잦은 합동 군사훈련 횟수를 줄이는 것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이후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다. 중심 내용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연내 종전선언과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회담을 추진하여, 65년간 이어져 왔던 휴전 상황의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이후의 초점은 북미정상회담(‘조미수뇌상봉’)이었다.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북미간 합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하였다. 여기에서 이들은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평화·번영의 새로운 양국 관계 설립,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대규모 경제개발 협력, 미군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 수습 및 송환에 합의하였다. 이로부터 2개월 후인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연설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평양 선언’이라고 불리는 남북 합의 6개항을 발표하였다. 이때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2018년 12월까지 충실히 이행되었다.

2019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2월 27일~28일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했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되는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분기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회담은 빅딜과 스몰 딜 어느 것도 아닌 노딜로 나타났다. 남한과 북한 모두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당시 북한은 영변 핵 시설 폐기를 대가로 유엔 안보리의 핵심 제재 5건을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은 회담이 결렬된 후 “미국 측이 영변 지구 핵 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비핵화후 제재해제와 행동 대 행동이라는 단계적 이행 사이에서 흔들린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국내 정치가 노딜을 유도했다. 회담 결렬 후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좌절된 것이 분명하다. 그는 4월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러시아대통령을 만났고, 그로부터 두 달 뒤인 6월20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놀랍게도 6월30일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 이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결정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문재인대통령의 평화국면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희망에 의한 것이었음이 최근 불턴 회고록에서 밝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까지 적절한 관리가 필요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마지막까지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회동에 응했을 것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중지를 요구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초부터 국제적 제재를 받지 않은 영역에서 남북간 협력의 가능성을 줄곧 타진했지만, 기회를 잡지 못했다. 나름대로 남북간 북미간 평화체제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은 현실에 직면하면서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필자는 이를 보면서 근래에 전재성 교수가 개념화한 불완전주권국가에 주목했다.¹⁰⁾ 아래로부터 민주정부에 대한 기대가 지속적으로 커지지만, ‘불완전주권국가’라는 벽에 자꾸 부딪치는 상황에서 그가 쓴 ‘운명’이 자꾸 오버랩되고 있다.

5.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하여

역사적으로 평화는 크게 패권형 평화와 세력균형형 평화로 구분된다. 패권형 평화가 전통적 중화질서나 팍스 아메리카라는 표현으로 대변되었다면, 균형형 평화는 적대적인 힘들이 균형을 이룸으로써 얻게 되는 것으로, 냉전하의 유럽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된다. 냉전하의 동아시아도 그런 균형형 평화를 유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실은 평화와 거리가 멀었다. 동아시아는 ‘냉전’이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중국 내전과 한국전쟁, 양안간 포격전과 심리전, 베트남전쟁이라는 연속적 전쟁을 경험하였고, 그것은 냉전평화보다는 냉전속의 열전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렸다. 한반도나 양안의 접경지역, 베트남은 그런 국지적 열전이 진행된 열점에 해당된다.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한국전쟁이후 한국사회를 지탱해온 한미동맹과 현재의 한반도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 그리고 미래의 평화체제라는 세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다는 데서 온다. 구갑우는 이를 트릴레마라고 표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핵화협상과 평화체제 협상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¹¹⁾ 그런 점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유형의 평화, 즉 상호인정형 평화를 요구한다. 그것은 오랫동안 쌓여온 불신을 걷어내고 신뢰를 구축하면서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1992년에 이루어진 비대칭형 탈냉전을 대칭형 탈냉전으로 바꿀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것은 남북간 평화협정과 함께 북미간 북일간 관계정상화를 의미한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변수는 동아시아의 질서의 축을 이루는 미중관계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2008년 또는 그 이전부터 시작된 미중경쟁은 동아시아에서 평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미중간 경쟁이 고조되어 갈등으로 전환되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는 어렵게 된

10) 전재성, 2017, 동북아의 불안정한 주권국가들과 복합적 무정부상태, 세계정치, 26, pp.83-126.

11) 구갑우, 2019, 「한반도 평화체제의 역사적 이론적 쟁점」, 『신뢰의 조건과 평화프로세스: 증여에서 인정으로』: 2019년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다.

두 번째로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은 미묘한 문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 직후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발표했다. 미 의회는 2018년 7월, 이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하원에서 처음으로 주한미군 축소를 제한하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최근의 지소미아 및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태도는 한미동맹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주장을 일리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미군 주둔비용 대폭인상안으로 압력을 가했다. 미국의 주요 정책결정자들은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 주한 미군 일부 철수 카드를 들고 나왔다. 미국은 지소미아 문제가 일단락된 후에도 계속 분담금 대폭 인상안을 철회하지 않았다.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한미동맹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주독 미군의 감축이 이루어지면서 주한 미군도 감축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세 번째 변수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발휘할 수 있는 자율성과 능동성이다. 남북한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교류와 협력을 약속하면서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의 재개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암묵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유엔의 제재 때문에 이를 단행하지 못했다. 우리는 보다 큰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은 적어도 대선까지는 다시 이를 거론할 생각이 없는 듯 하다. 하나의 변수는 대선국면에서 트럼프대통령의 입지가 자꾸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볼턴 회고록을 둘러싼 논쟁은 몇가지 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시사를 제공한다. 미국 극우파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고 알려진 볼턴은 “북미협상이 한국의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는 주요 결정을 자신의 참모들(폼페이오 및 볼턴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내렸으며, 자신의 재선에 도움이 되는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김정은에게 “대북 제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일본이 남북미 접근에 대해 매우 불편하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들은 한국이나 북한 각각에 대하여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국 사회의 보수언론들은 “김정은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오판이 성급한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볼턴의 발언을 통해 트럼프가 행동 대 행동이라는 단계적 문제 해결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협상이 실패했지만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다는 해석이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정부의 평화를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한 협상실패의 원인에 대한 남북간 해석의 차이를 좁히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밝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서 발생하는 고뇌와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이 다시 한번 6.25 기념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와는 별도로 우리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뿐 북한의 선미후남 정책이 가져온 오류를 지적하고, 동시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류협력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 민관협력의 공적기구 설립, 비군사적 통행과 통관 관할권의 유엔사로부터의 이관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평화를 위하여 한반도 생명공동체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구적 기후변화와 접경지역 재해와 재난, 코로나 19와 같은 세계적 감염병이나 인수공통 전염병, 그리고 북한의 만성적 식량위기는 이미 필요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세션
2**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 : 전망과 과제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 : 전망과 과제(남북관계)

천해성(서울대)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 : 전망과 과제 (남북관계)

천해성(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첫 번째 목표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과제가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이었음.
- 지난 90년대 이후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발전 과정에서 전진과 후퇴가 계속 반복되어 오면서,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 우선 국내적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여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토대로 하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는 문화, 관행, 여건 마련 필요
 -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기존 남북간 합의를 존중하는 토대위에서 남북 합의사항이 규범력을 가지고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함께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
 - 국제사회와는 여러 국제기구, NGO,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남북간 다양한 과제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은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체제를 갖춤으로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
-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차원의 과제는 우선 우리 사회 내부에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함. 최근 대북전단 관련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관계 차원의 여러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출발은 남북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시작되기 때문임.
- ‘90년대 중반 이후 대북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은 치열한 진영간 갈등, 여야간 첨예한 대립의 장이었음. 우선 21대 국회의 출범과 함께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공론의 장에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의 모색이 시작되기를 기대

- 아울러 전문가, 민간·종교단체, 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에 대한 토대를 굳건히 하는 것이 필요
-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 서독에서 (정치)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이나, '89년 노태우정부 시절 여야 합의를 통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마련 등의 경험을 활용할 필요
- 또한 동서독 교류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당국간 대화와 협력과 함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NGO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한 과제
- 현재 교류협력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바, 이와 함께 변화된 상황에 맞게 교류협력 제도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도 필요
-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이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함. 경제, 사회문화,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남북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제도화, 체계화되어 남북이 사실상 하나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때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이 가능
- 분단 이후 5차례의 정상회담, 660여 차례의 당국간회담, 250여건의 합약이 있었지만 현재의 남북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음.
 -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보다 제도화되어 정치·군사적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여타 분야의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어야 함.
- 남북 합의에 대한 국회 동의 및 비준 등을 통해 이를 입법화 및 제도화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상응한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
- 또한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이행되고 안착되는 것이 필요

- '18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간 포괄적인 적대행위 중단, DMZ의 평화적 이용 등에 대한 합의가 정상 및 군사 당국간에 이루어진 만큼 차질 없는 이행이 중요
-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은 그 자체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중요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이후 재래식 군사력 불균형을 우려하는 북한을 실질적인 비핵화 과정에 견인해 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
- 최근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 우선 코로나19 관련 정보교환 및 방역협력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분야 협력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최근 제기되고 있는 신안보 분야에서 남북이 함께 협력할 분야들이 많이 있음.
 - 그동안 남북간 협의해 온 기존 과제 외에 최근 국경을 초월하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미세먼지, 산림, 기상, 공유하천 관리, 산불 등 재난 대응,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등의 협력이 필요
 - 이런 분야의 협력은 일방적 지원이나 시혜성 협력이 아니라 호혜적 협력이며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므로 지속가능한 협력에 보다 한 발 다가설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차원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상호의존도를 높여 나가는 좋은 사례 축적 가능
- 아울러 남북간 협력이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리도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유리
 - 이러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현재와 같은 대북제재 상황에서의 교류협력 추진뿐만 아니라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세션 2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 : 전망과 과제

코로나 19 이후 지속가능한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

박상민(서울대)

코로나 19 이후 지속가능한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

박상민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사태는 건강안보 강조, 탈세계화, 공급밸류체인의 분열, 지역 경제 블록화 및 리쇼어링 등 사회-경제-외교-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를 촉발하였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남북 교류협력 전략은 무엇일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본 원고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대두되는 여러 변화 중 지속가능한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수립하는 데 중요한 측면을 살펴보겠다.

우선, 건강안보와 관련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건강안보의 중요성은 체제안정과도 직결되며, 부족한 보건의료 재원을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는 중요한 창구가 대부분 건강 안보와 관련된 기구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질병에 대한 세계의 대응은 크게 건강안보(health security)와 건강권(health right)의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건강에 인권이 강조된 건강권이라는 개념은 쉽게 받아들여진다. 이에 비해 건강에 안보의 관점이 결합된 건강안보는 개념은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전 세계는 건강안보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역임을 새롭게 깨닫고 있다. 건강안보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전세계적인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언론에 등장한다. 건강안보의 관점에서 자국민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조직이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보건성이 이러한 건강안보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심각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비상방역위원회가 운영된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북한도 체계적인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상시적인 질병관리 조직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질병의 전파에 국경이 무의미함을 경험하고 있는 현재, 우리의 건강과 안전은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적 개념에서 접근해야 함을 코로나 19를 통해 재확인하였다. 우가장 가까운 북한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적 협력방역은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이며, 이를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대비해야 한다.

건강안보는 국제관계 및 ODA 예산 배분에도 중요한 고려점이 된다. 2000년대 초반, 건강 관련한 UN 밀레니엄 goal 달성을 위해 새롭게 조직된 국제기구는 대부분 감염성 질환과 관련이 되어 있다. 특히, 영유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세계백신연합(GAVI)와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퇴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Global Fund)는 각 나라에서 경제 수준에 따라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단순히 인도적인 이유만으로 선진국들이 부담금을 지불하지는 않는다. 제국을 경험했던 영국 정부는 각 국제기구들에게 예산을 배분할 때는 해당 기구의 강점과 이 사업이 영국의 국익에 미치는 영향인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다. 이때 세계백신연합 (GAVI)과 글로벌펀드 (Global Fund)는 영국의 국익 측면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데, 바로 감염병 관리라는 건강안보 측면과 직결되는 기구들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북한은 보건의료 지원을 받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강화된 2017년 이후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북지원은 차단되었다. 그리고 이는 인도적 지원 영역에도 의도되지 않은 많은 영향을 끼치며 북한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적 긴급한 수요에 대한 공급도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게 하였다. 모자보건 영역의 경우에도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에 의존하여 진행되던 WHO의 대북 모자보건사업은 북핵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2015년 이후에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북한은 글로벌펀드(Global Fund)나 세계백신연합(GAVI)과 같이 특정 감염성질환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다자기구에 대한 보건의료 재정 의존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이렇게 일부 다자기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북한의 보건의료 재정구조는 외부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 전역의 결핵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글로벌펀드도 2018년 2월을 기점으로 지원이 중단되면서 북한의 결핵관리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글로벌펀드는 2010년 이후 북한에 총 1천150억원을 지원하였는데, 2017년 글로벌펀드 담당자는 한국정부의 글로벌펀드 누적 기부액이 글로벌펀드가 북한에 지원한 금액의 1/3 수준에 머무른다는 지적을 하면서 한국 정부의 기여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공식적으로 글로벌펀드와 세계백신연합은 자원 모집 과정과 집행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공여국의 입장에서 부담금을 낼 때 특정 국가에 특정 사업을 지정할 수 없어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이 두 기구에서도 외교부와 협의할 때 북한에 지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정부에

그에 적합한 기여를 비공식적으로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글로벌펀드가 북한의 결핵사업 지원 중단을 결정할 때의 명분은 북한 내 지원 물자 배급과 효율성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와 이사회 및 공여국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충격을 주었으며, 유엔(UN)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2018년 10월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에서 최초로 북한의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결핵사업을 위해 약 350만불을 배정하였다. 다행히 2020년 1월에 글로벌펀드는 북한의 결핵 말라리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한 나라의 감염병관리를 일부 외부 기관의 재원에 의존할 때는 국제관계나 정치적 의사결정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남북 직접 교류협력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다자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코로나 19 이후 세상은 글로벌 공급밸류체인이 분열되고, 지역경제 블록화 및 리쇼어링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필수 의약품 및 물품 생산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여겨진다. 이번 코로나 19 위기를 겪으면서, 북한은 의약품과 물품을 지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자국 내 의료물품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기존의 수요에 덧붙여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건의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북한 당국자가 직면한 큰 도전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거의 단편적인 지원이나 협력 모델을 넘어서서 경제협력과 국제보건의료 ODA를 결합하여 창조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남북이 서로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교류협력 모델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대북 보건의료 사업의 대부분은 확보된 재원을 국제기구나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한 후 이 예산으로 의약품, 의료소모품, 특수치료영양제품을 조달하여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향후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전략을 구상할 때에는 생산을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북한 내 또는 남북 접경지역 내에 경제협력지구가 활성화되어 한반도 건강공동체에서 필요한 의료물품 및 약제의 생산인프라가 구축된다면, 국제보건의료 ODA 시장과 접목된 지속가능한 새로운 중장기 교류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19를 경험하면서 한반도는 정치-경제-국제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거대한 변화

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남과 북의 지도자는 서로 코로나19 위로 친서와 답신을 주고 받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남과 북에 함께 시작할 수 있는 담론의 주제는 ‘한반도 건강공동체’이다. 남북이 상이한 보건의료체계를 발전해 나간 역사적 배경과 상호 자원 조달 방안 및 의료전달체계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우선, 한반도 건강 공동체 협력방역을 시작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의 강점을 살린 공동 보건의료 R&D 사업을 추진하고, 경제협력과 국제보건의료 ODA를 결합하여 창조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교류협력 모델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코로나 19 이후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남북 직접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다자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intended for writing the memo's content.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containing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below the header.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intended for writing the memo's content.

창립 14주년 기념 학술회의

한국전쟁 70주년
“오래된 전쟁,
새로운 평화”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행일 : 2020년 6월 22일

펴낸곳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전화 : (02)880-4052~4

홈페이지 : tongil.snu.ac.kr

본 도서의 모든 저작권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있습니다